참여연대

제14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일시 | 2008년 2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 YWCA 4층 대강당

자료집 순서

2007년 사업보고 ····· **3**

2007년 사업 종합보고 ····· 4

2007년 활동가구별 사업보고 ····· 20

2007년 연대사업 보고 ····· 47

2007년 부설기관 보고 ····· 53

2007년 감사보고 ····· **57**

2007년 사업감사 보고 ····· 58

2007년 회계감사 보고 ····· 61

안건Ⅰ. 2008년 사업계획안 승인 ····· **63**

2008년 참여연대 5대 활동 방향 ····· 64

2008년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 76

2008년 연대사업계획 ····· 101

2008년 부설기관 사업계획 ····· 102

안건Ⅱ. 결산 및 2008년 예산안 승인 ····· **105**

2007년 결산 ····· 106

2008년 예산 ····· 109

보금자리 특별보고 ····· 111

안건Ⅲ. 임원인선안 승인 ····· **113**

부록 ····· **119**

참여연대 정관 ····· 120

참여연대 기구표 ····· 131

참여연대 노래 ····· 132

2007년
사업보고

2007년 사업 종합보고

Ⅰ. 주요 활동성과

사회경제개혁 분야

○ 3대 가계부담 완화운동을 통한 민생안정 실현 -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낮추기

- 교육, 의료, 주거 등 필수적인 생활 영역의 과도한 가계비용 부담의 문제점을 분석, 지적함으로써 가계부담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의 필요성을 적극 쟁점화 하는 동시에 공공성의 강화, 국가책임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 제시
- 사교육비 실태 보고서 발간 및 학원법 개정 등 사교육비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참여정부 기간 전월세 인상실태 조사보고서 발간 및 공정임대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제출/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안 제출/ 의료비 비급여 진료항목 등 건강보험에 대한 모니터 활동 전개

○ 서민금융의 안정을 위한 폭리제한 및 대부업 규제 촉구운동

- 이자제한법령 및 대부업법령 개정 추진 및 폭리 규제와 대부업 관리강화 방송광고 금지를 위한 네티즌 캠페인, 릴레이 기고 등 적극적인 입장개진과 운동 전개
- 연 66%의 등록 대부업체 이자를 49%, 미등록 업체는 30%까지 인하하는 성과를 만들었으며,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와 정부의 대부업체 단속점검 강화에 영향을 미침

○ **소유든 임대든 주택은 1채만 -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전개**

-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안정적 주거수요 확보를 위해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사업으로 진행
- 1가구 1주택 협약운동을 통해 시민사회, 주거약자, 국회의원 및 대선주자들의 협약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억제 및 다주택 청산을 공론화하고 제도화 방안을 제출함

○ **국민연금 개혁,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운동**

- 이른바 '용돈연금' 논란을 빚은 국회의 졸속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모니터 및 반대운동,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각종 성명·논평 등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올바른 연금개혁의 방향과 대안의 공론화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실계측년도를 맞이해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집중캠페인 진행.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 대학생 체험캠페인 진행/ 최저생계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 한겨레, 다음, 오마이뉴스 등 공동기획기사 및 캠페인 전개
- 한국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찾기 위해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라는 주제 하에 5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대안복지 패러다임 세미나 진행

○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및 경영권승계 불법규명 위한 국민운동 전개**

-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이후, 삼성 불법규명을 위한 활동주도.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등 사건 핵심인물들에 대한 고발, 삼성 특검법 청원 및 특검법 제정 촉구, 검찰 특수수사본부 및 특검의 성역 없는 조사 촉구, 금감원 국세청 등 감독기관에 대한 수사 및 진상규명 협력 촉구활동
- 삼성 불법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개최,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구성 및 각종 연대활동 전개

○ **미조직 취약노동 및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

- KTX 여승무원 문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 등 비정규 핵심현안 연대 및 지원,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모니터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 '노동시장 정책의 대안모색' 시리즈 토론회 개최 등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적 대안의 모색

권력감시 분야

○ 시민의 눈높이로 정치를 말한다 - '유쾌한 정치토크' 개최

- 2007년 상반기 매월 '유쾌한 정치토크' 개최. 대학 등록금, 한미FTA, 선거법의 유권자 규제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이거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생활정치의 주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론화하는 토론 프로그램 진행

○ 대선 유권자 운동 - 대선 후보 정책 검증을 위한 '100인 유권자위원회'

- 참여연대-한겨레 공동으로 '100인 유권자위원회' 기획 및 운영. 후보별 대표공약, 일자리, 교육공약에 대한 정책 워크숍과 주요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각 후보의 대표공약, 일자리, 교육 공약을 100인 유권자위원이 각각 평가하여 최종 평가보고서 발표
- 유권자위원 100명 중 연인원 60여명 이상이 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시민참여형 정책평가 운동의 가능성 발견

○ 선거법 개정운동

-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규제하는 선거법 93조(사전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과 선거법 개정청원안 제출, 2건의 공익 소송과 선거법 피해 네티즌 전화 상담 등 네티즌 지원활동, 네티즌 참여 캠페인 추진 중

○ 변호사 징계정보 사이트 구축

- 비윤리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들의 징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 시민들이 변호사 선임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공개활동 진행

○ 로스쿨 도입운동 전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왜곡시킬 총입학정원 설정 반대 등 올바른 로스쿨 도입을 위한 논평, 성명 등 의견개진 활동, 대국회 로비활동 전개

○ 판결비평 활동

- 사법부의 판결 중 국민적 상식과 반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에 부응하지 못하는 판결 등을 끄집어내 공론의 장에 올리는 판결비평 활동의 지속적 전개

○ 행정감시센터 발족 및 관료 감시운동 추진

- 기존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를 확대 재편해 행정감시센터로 출범. 관료감시, 정보공개, 공익제보자 보호 등 전면적인 행정감시운동 전개
- 경제 및 건설관료 퇴직후 재취업 실태보고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등 관료감시 보고서 발표, 경제관료의 취업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캠페인 전개, 퇴직 공직자 로비금지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등 활동

○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운동의 심화

-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및 정보공개법 개정 TF 참여
- KBS, 세계일보 등과 정보공개 공동기획 추진

평화군축/ 국내외 연대사업 분야

○ 국민합의 없는 한미FTA 졸속협상 저지활동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대외협력팀을 맡아 협상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 내용과 결과를 감시하는 정책 활동 수행. 각종 토론회와 정책의견서 발표, '국회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이끌어냄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대책단' 구성 및 간사역할 수행. 한미FTA 각 분야별 쟁점 보고서 발표. 특히, 한미FTA 체결 시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 헌법을 포함하여 160여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대책 등 정부의 공공정책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 입증

○ <2007 대선연대> 활동

- <2007 대선연대>를 구성해 집행위원장 단체로 참여. 각 분야를 망라한 7대 핵심의제 선정 발표 및 의제수용 촉구활동
- 유권자운동 차원에서 각계·각층 유권자들의 대화모임 및 '1000개의 생활공약' 등 유권자 캠페인 진행
- 유권자 참여를 제한하는 선거법에 대한 개정운동, 후보 정책공약 평가 토론회 개최

○ 이라크, 아프간 파병연장 반대운동

- 아프간 한국인 피랍 관련 조속한 석방 촉구 국제호소문 발송, 노란리본달기캠페인 등 진행, 아프간 지역재검팀(PRT) 파견 반대입장 발표
- 이라크 정세, 자이툰 부대 활동 모니터링, 국회 파병연장 동의안 부결촉구 활동
- 파병정책 관련 정보공개 활동 및 행정소송 진행

○ **'평화와 눈 맞추다' 등 시민과 함께 평화 나누기**

-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추진
- 평화 감수성을 나누는 '평화와 눈 맞추다', 시민 토론회 '시민, 안보를 말하다', '영화로 보는 전쟁과 평화' 진행
- 대학생 대상으로 '평화학교 - DMZ에서 바그다드까지' 진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체험 시도, '평화열차'는 7월 평화의 달 행사 기획과 연계하여 회원행사로 진행

○ **'평화국가' 만들기 시민행동**

- 평화국가 비전 제시 위한 토론회 개최 등 평화국가 담론 확산 활동
-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평화이슈들을 집대성한 '평화백서' 출간작업
-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군사기지 건설 반대활동, 비핵군축 정책과제 제언, 남북관계의 재인식과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위한 연속 간담회 개최

○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 연대**

- 버마의 민주화 지원운동, 필리핀 정치살해 반대 캠페인
- 아시아에 대한 재인식과 성찰을 위해 아시아 지역 연구자들을 필진으로 한 칼럼 <아시아 생각> 게재

○ **한국정부의 대외원조(ODA) 정책 감시**

- 해외개발원조 정책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뉴스레터 발간. 대외원조의 중요성 및 실태와 쟁점 소개. ODA에 관한 관심의 확산과 공론화에 기여

시민참여 분야

○ 회원행사 활성화 가능성 확인

- 봄산행, 회원대동제, 송년의 밤, 신입회원한마당, 고궁 숲체험(6월), 회원대동제 등 다양한 회원행사 진행하면서 회원행사 활성화 가능성 확인
- '삼성 이슈'에 대한 회원대토론회 개최나 '삼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난 10년 활동'을 정리하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연대 회원으로서의 자긍심 강조

○ 참여연대 곳곳에서 열린 시민강좌

- 시민교육팀은 물론 활동부서에서도 시민강좌와 토론마당 등을 통해 다수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 공부하고 싶은 직장인을 위한 '주경야독' 시리즈, 주부를 위한 '굿모닝 세미나' 시리즈, 20대를 위한 '시민운동 현장체험' 시리즈, 참여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상하반기 기획강좌 시리즈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새로운 소통방식 시도

- 네티즌 '1분액션', '영상논평' 등 반향이 있는 새로운 운동방식 시도
- '통인동 편지' 등 뉴스레터 개편으로 온기가 흐르는 따뜻한 방식으로 회원과 소통 노력

○ 자원활동 활성화 지원

- 자원활동 활성화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중
- 20대를 위한 인턴십/펠로우십 경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약 30여 명 규모로 운영 중
- 향후 청년층의 시민운동 체험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지속할 계획

Ⅱ. 2007년 5대 활동 방향에 따른 분석 평가

2007 활동방향① 사회양극화 해소, 민생문제 해결 역량집중

- **민생희망캠페인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
  - 1가구 1주택 운동
  -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수립 및 법제정
- **독과점적 거대기업들로부터 소비자 및 중소기업 권익 보호운동**
  - 독점 담합 사례조사, 발굴, 공익소송
  - 참여연대 제 2 경제개혁운동으로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해소 및 사회보장체계 개혁**
-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운동**
- **조세정책개혁 캠페인**

활동경과와 약평

○ 2007년 참여연대는 양극화해소와 민생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위에 적시한 바대로 집중 사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음

○ 민생안정을 위해 3대 가계부담 완화운동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함.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을 추진한 것은 타당한 과제 설정이었으며, 사교육비, 전월세비 등에 대한 연속 실태보고서와 공정임대료제도 등의 대안 제시는 언론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주목과 호평을 받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주력사업이었음에도 전반적으로 준비가 늦어진 점, 이슈의 역동성에 비해 보고서, 제도개혁안 제출 외에 효과적인 사업수단을 개발하지 못하고 정적인 운동에 그친 점,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나 회원, 시민들과의 결합 등 시민참여형 운동을 만들어 내지 못한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음

○ 사회안전망의 확충 측면에서 기초연금 도입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한 활동,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을 위한 최저생계비 체험 캠페인 등은 시의성 있게 이슈를 주도한 활동이었으나, 의제의 성격상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 노동 분야에서는 KTX, E-Land 등 주요 비정규직 현안에 대한 연대사업에 적극 참여했으며, 현안의 해결여부를 떠나 비정규직 연대에 적극적인 시민운동이라는 평판과 신뢰를 확보함

○ 현안대응을 넘어서 비정규직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대안적 노동시장 정책 시리즈 토론회 등의 사업을 시도함.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운동의 노동문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대안 정책의 모색은 타당한 방향이었으나 추상적 정책방향 수준 논의에 머물렀던 점, 직군분리, 직무급 임금체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주도하는데 소극적이었던 점, 노동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만들어 내기보다 전문가 중심의 논의에 그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됨

○ 처음 시도한 '근로감독 행정 모니터', '노동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은 눈에 띄는 성과를 남기지 못했으나, 일종의 틈새시장인 만큼 노동사회위원회 고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시도할 필요가 있음

○ 경제, 조세개혁 분야는 전반적으로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나 과제에 부합하

는 활동을 하지 못했음.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 기획력의 부족 그리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지난해 연말 불거진 삼성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경제위원회의 의욕과 활동력이 복원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 신호임

2007 활동방향② 비핵군축운동 중심으로 평화국가 토대 만들기

■ **평화국가 만들기 기획사업**

-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비핵군축운동, 평화백서
-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에 대한 시민청문회
- 이라크·레바논 파병군 철수 운동
-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 '평화와 눈 맞추다' 등

■ **아시아 연대**

-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인권옹호자 암살 문제 연중 캠페인
- 아시아 시민사회단체 현지 방문, 교류
- 월례 포럼 '아시아 생각' 개최

■ **ODA(대외원조) 감시운동**

-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 주제별 연재
- ODA 감시활동의 국제연대망 구축, 국제워크샵 개최

활동경과와 약평

○ 평화국가만들기 기획사업 중 시민참여 프로그램들의 의미나 성과가 눈에 띔. 시민토론회, 영화보기, 평화열차 타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실험적 시도로 호평을 받았으며, '평화학교'의 경우 참가자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나 참가자 만족도 면에서 유의미했음.

○ 반면 파병관련 일상적 모니터 이외 국방분야의 집중 모니터 사업이 부재

했으며, 국방정책 감시와 군축의제 발굴 위한 논의 틀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이루지 못함. '주한미군 재배치 시민청문회' 등은 참신한 아이디어였으나 규모와 시기 문제 등으로 추진하지 못함

○ 평화국가 담론의 확산을 위해 2007년 상반기 3회의 콜로키움 등을 개최했으며, 외부로부터 일정한 관심과 주목을 받았음. 그러나 이후 평화국가 연구모임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된 점이 아쉬움.

○ 국제연대 분야에서 아시아칼럼 연재와 포럼 개최, 버마 민주화 및 필리핀 정치살해 중단 연대사업 등을 통해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사업적 시도를 진행함. 그러나 사업의 일관성 문제와 참여연대만의 아시아 연대 기획을 갖지 못한 한계가 지적됨

○ 대외원조(ODA)감시와 관련해 사업팀이 안정화되고, 뉴스레터, 모니터 등 일상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2007 활동방향③ 권력감시운동 전문화, 입체화

■ **정당, 의원 의정활동 평가 사업**

- 민생정책 중심으로 각 정당과 소속 의원의 당론결정, 법안발의, 추진 경과 등을 비교 평가
- 재벌 눈치보기, 건설족 비호 등 경제권력에 휘둘리는 국회비판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 판결비평 및 대법관 모니터 사업 강화
-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 개선운동

■ **공익법센터 '시민자구운동' 재출발**

- 시민권익 옹호를 위한 기획 공익소송 및 입법운동 전개

■ **관료감시운동 '책임지는 관료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캠페인' 본격화**

- 관료감시보고서 발간, 퇴직후 취업실태 모니터 지속
- 관료에 의한 개혁좌절보고서 발간 등

활동경과와 약평

○ 정당정책 평가 사업은 의정감시센터가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의미 있는 기획이었으나, 대선 등 시기적 특수성으로 인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음. 그러나 부동산 정책, 재래시장 보호대책 등 상반기 세 차례의 의미 있는 '정당정책 비교 평가 보고서'를 발간, 향후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사업임

○ 2007년 새롭게 시도한 '유쾌한 정치토크'의 경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생활정치 영역의 이슈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토론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슈 선택, 진행 방식 등을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사법감시 분야의 판결비평은 꾸준히 경험과 성과를 축적해 가고 있으나, 주제 선택 시 전문가적 관심사가 아닌 시민적 관심사를 고려하고 시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대법관, 헌법재판관 집중모니터는 좋은 기획이었으나 사업으로 현실화되지 못했음.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함. 아울러 삼성, BBK사건 등으로 검찰개혁 문제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임

○ 공익법센터는 지난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논의력, 활동력이 보완되고 있으며, 사시정원제 위헌소송 등을 집중사업을 준비함. 향후 법률전문가의 관심사가 아닌 시민적 관심사로 활동의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삼성중공업 원유유출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등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관료감시운동은 정책실패 관련 관료감시 보고서, 퇴직관료 재취업 제한 캠페인 등 의미 있는 사업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수준의 관료감시 운동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음. 관료데이터 베이스 등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고, 실패한 대형국책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를 각 사업부서와의 연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관료의 등원-진급의 기본 메커니즘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제기 등 다양한 각도의 사업적 시도가 필요함

2007 활동방향④ 대선 유권자 캠페인 전개

■ **사회경제 문제 중심의 의제설정 및 공론화운동**

-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등 민생의제를 공론화하여 대선 핵심의제로 만드는 유권자운동

■ **정당별 후보별 정밀 정책검증운동**

■ **경선 대선자금 제도개선 촉구캠페인**

■ **유권자참여운동**

- 정책제안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패널 등 유권자 참여형운동 전개

활동경과와 약평

○ 참여연대의 대선 유권자 운동은 <2007 대선연대> 및 한겨레와 공동으로 진행한 '100인 유권자위원회' 등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됨. 정당과 후보자 중심의 선거판에서 소외되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대선활동의 방향을 세우고 추진한 것은 타당했음

○ 대선 의제설정은 대선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생, 생태, 평화, 경제, 복지, 여성, 지역발전 등 각 분야에서 7대 핵심의제를 선정함. 이는 시민사회가 합의한 한국사회 미래 발전방향과 관련된 의제설정이란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의제의 참신성과 전파력 그리고 이를 통한 선거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대선연대 활동은 여러 한계점을 드러냈음

○ 참여자들의 열의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유권자 참여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나 가치는 충분했음. 그러나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사업 개시 시점도 늦어져 충분하게 후보검증을 하기 어려웠던 점, 후보 초청 토론회와 온라인 소통 이외에 실질적 참여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운 부분임. 대선자금 감시활동은 마땅

한 개입수단을 찾지 못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음

2007 활동방향⑤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프로젝트 전개

■ **홍보의 다변화와 적극화**

- 오해는 풀고 이해는 깊게, 그리고 친근하게.
- 참여연대의 모든 홍보물, 발간물, 온-오프라인 컨텐츠의 통합관리와 혁신

■ **웹 사이트의 내용과 기술기반 개선**

- 보도자료 위주의 웹 페이지를 대화와 논쟁, 일상의 삶 등이 교류 가능하도록 컨텐츠 개편, 쌍방향 소통을 위한 기술기반 확충

· **교육·토론 프로그램의 확충**

-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 급변하는 세계사 쟁점 등을 다루는 사회교육·토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신설

■ **회원 후원 응답체계 개선 및 자원활동 지원 강화**

- 각종 연수·인턴·자원활동 프로그램 체계화
- 회원, 후원자의 소중한 기여와 기부에 대한 '응답'체계를 다각화, 전문화하고 정보 전달 공유 수준을 개선

활동경과와 약평

○ 시민교육사업은 주경야독 등 계획한 파일럿 강좌프로그램 대부분을 시도했고 나름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시민운동 현장체험에 이어 인턴십/펠로우십 프로그램도 좋은 반응 속에 시작해 향후 참여연대 업무지원 및 청년층 교육, 조직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홍보사업은 참여연대 비방 대응에 관한 실무 지원, 뉴스레터 제작 등

다소 소극적 수준에 그쳤으며, 회원확대나 대시민사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적 홍보사업으로 나아가지 못함

○ 인터넷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추세에 맞는 개편방향을 설정했으나, 여러 실무적인 이유들로 개편이 지체되었음. 이로 인해 대선, 삼성 건 등 토론과 논쟁이 활발했어야할 국면에서 온라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남.

○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네티즌 '1분액션'과 '영상논평' 등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 방안 개발은 꾸준히 시도됨. '통인동 편지' 등은 회원과 시민들에게 대화방식의 소통을 시도해 반향을 얻고 있음

○ 대회원 응답체계 및 서비스 강화는 올해 회원팀 신설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관리 위주의 회원사업에 그침. 회원사업 목표를 재점검하고 회원행사 이외에 회원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2007년 활동가구별 사업보고

Ⅰ. 사회경제 분야

민생희망본부

● 총평

- 올해 민생팀 신설과 더불어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시작. 민생 문제는 2007년 참여연대 집중 사업으로 홍보되었으나 준비기간과 컨텐츠가 충분치 못했음
- 시급한 가계부담 사안인 사교육비, 전세값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분양가 원가 공개와 적정 분양가격 공개를 요구하는 등 '3대 가계부담'에 대한 공론화 및 문제제기를 시도했음. 학원비 관련 보고서의 경우 교육부가 적절한 학원비 책정기준 검토에 나서게 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2007년은 전반적으로 민생 현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을 위한 워밍업 기간이었음. 운동 주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민생문제인 만큼, 기존의 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운동전략을 고민해야 함.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해 대학생, 학부모, 관련단체들과 공조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주요사업

1.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 주거비 관련,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발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분양가 원가 공개 및 전월세자 보호를 위한 활동 전개
- 교육비 관련,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발표,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중심의 법 개정안 마련, 대학 예결산서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 등 등록금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준비

2. 서민경제 보호사업

-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령 개정을 통한 대부업계 폭리 규제와 이들에 대한 관리강화, 방송광고 금지 촉구 등의 활동 진행
- 서민대상 대출확대나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공공성 확보 요구
- 제도권 금융기관 자금의 대부업계 투입 경계, 방문판매를 위장한 불법다단계를 금지시키기 위한 활동 진행

3. 1가구1주택 국민운동

-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여 안정적인 주거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을 연대사업으로 진행
- 시민사회, 주거약자, 국회의원 및 대선주자들의 협약 운동 진행
- 공직자 주택제한운동 선언 등 통해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억제 권고

노동사회위원회

● 총평

- 109개 시민단체와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불매운동

추진함. 현안의 해결여부를 떠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함. 그러나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와 외주화 사태를 막는데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비정규보호법 개선과 간접고용 방지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활동이 미진하였음

- 노동양극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방안' 및 '직군분리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시리즈 토론회 진행. 그러나 추상적 정책방향 논의에 머물러 있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공감대를 만들어 내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됨
- '근로감독 행정 모니터', '노동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남기지 못했으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해 기존 조직운동과 차별화된 입지와 정체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사업

1. 노동시장 정책연구 및 대안제시

-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비정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촉구 논평 및 기자회견 개최

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SR 담론 확산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 진행
- 기업들의 지속가능보고서 분석 작업 진행, 국내외 각종 지표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부문의 사회책임 지표개발 중
- 7대 공기업을 대상으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유엔 지속가능보고서 정보공개 인덱스)에 명시된 노동부문 정보를 수집해 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

3. 노동행정 감시운동

-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 발표 및 노동부 예방감독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 대법원 노동판례의 성향분석 작업 진행

4. 비정규직 문제 대응

-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논평, 성명 등 의견개진 활동 진행
-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을 발족, 매주 목동 홈에버점 앞에서 이랜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는 캠페인과 온라인 상의 '이랜드 불매 서명운동' 진행

사회복지위원회

● 총평

-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 연금개혁 및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상설화를 위한 공동행동 진행. 다만 장기적인 방향과 입장에 대한 내부 논의가 부족했음
- 희망 UP! 복지학교 개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과정 모니터, 언론공동기획, 의견서제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음
- 대안적 복지체제의 방향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 세미나 사업 및 출판 사업 역시 수월하게 진행되었음. 그러나 시의적절한 기획과 높은 대중 참여도에 비해 발제와 토론이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었고, 위원회 내의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지지 못해 당초 목적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의료비 실태보고서 발표, 의료법개악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활동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을 모니터하고, 보건의료 개혁에 있어서 참여연대의 입장과 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음
- 신사회 위험에 해당하는 사업 분야는 시기적으로 주목 받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적절히 기획하지 못해 독자적인 활동은 하지 못함
- 보육료 자율화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은 참여연대가 중심이 되어 비교적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했으나 당사자인 부모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거나 대중적 이슈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연대활동은 단체간 입장 조율이 어렵고 활동 동력이 미약하여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음

● 주요사업

1. 연금제도 개혁

- 올바른 연금개혁 촉구, 연금개악 규탄하는 성명 및 논평 발표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상설화를 위한 의견서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발족하여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관련 공동 대응
- 공무원 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참여

2. 공공부조제도 개혁

-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상대적 수준 유지방식으로 확정, 이를 위해 정책간담회와 정책 토론회 개최, 릴레이 편지 등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응하는 활동 진행
- '거침없이 희망 UP! 최저생계비를 말하다' 복지학교 운영(식료품비, 쪽방체험, 거리캠페인 진행, 총 6회 후기 발행), 최저생계비 문제 관련 언론과 공동기획 진행

-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차원에서 수급자의 건강권 제한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폐지 활동 진행, 본인부담 납부 거부 선언 및 헌법소원 진행, 수급자 피해사례 수집, 보건복지부 공개 질의 및 성명 발표 등 진행

3. 대안복지 패러다임 연속 세미나

- 한국 복지체제 재편의 대안적 방향과 핵심과제를 찾기 위한 대안복지 패러다임 연속 세미나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 - 소외되지 않는 노동, 민주주의, 연대를 말한다'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

4. 돌봄의 사회화

- 여성가족부의 보육료 자율화 시설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및 기자회견 개최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 진행
- 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을 대비한 대응논의 착수

5. 보건의료

- 정부의 의료시장화-산업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저지 활동 전개
- 건강보험료 인상율과 수가 결정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응 활동
- 민생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의료비 실태보고서 발표
- 의료연대회의, 대선에서 보건의료 의제 이슈화 시도, 3不3行 정책(3불: 의료기관 영리화 정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료시장개방 정책 폐기/3행: 연간진료비 최고부담 100만원, 전 국민에게 주치의를,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및 10대 의제 50대 세부 과제 발표 등 활발한 활동 전개

6. 대선대응

- 사회복지위원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제 취합, 사회복지 학자, 활동가, 학생,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의제 서베이를 진행.
-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 하고 구체성, 실현가능성, 타당성, 일관성 등의 기준으로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평가

7. 기타

- 비닐하우스촌주민연대의 제안으로 참여연대, 공감, 민변 공동으로 주소지 찾기 소송을 진행. 서초구 잔디마을은 지난 11/16 승소판결, 강남 수정마을은 12/26 승소판결, 나머지 과천 꿀벌마을은 2월중 판결예정
- 복지동향 무리없이 발간, 단행본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출간, 단행본 『전환기의 한국 복지패러다임 : 새로운 방향과 대안의 모색』 출간

시민경제위원회

●총평

- 상반기에는 올바른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연대활동과 외환은행-론스타 인수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활동에 집중함
- 11월부터 연말까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그 측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탄활동에 매진하였음
- 애초 목표였던 대기업들의 독과점 또는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례 발굴에 실패하는 등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담합,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영역에 대한 기초조사, 현황이해, 쟁점파악은 물론이거니와 관련 분야에서의 기존의 시민사회단체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활동방식과 차별성 있는 활동방향과 사업을 찾지 못했음

● 주요사업

1. 조직구성 및 활동력 복원

- 시민경제위원회 소장(인하대 김진방 교수) 및 실행위원진 구성
- 위원회 활동방향, 사업에 대한 내부토론 진행

2. 생보사 상장 관련 활동

- 올바른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을 위한 연대사업(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등)
- 의견서, 토론회, 대국회로비 진행

3. 상법 개정 관련 활동

- 상법개정에 대한 논평, 의견서 제출

4. 금산분리 관련 대응

-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에 반대하는 논평, 의견서, 기고활동 등

5.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 규명운동

-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
-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법제정 촉구운동
- '이건희 왕국을 넘어 민주공화국으로' 토론회 개최
- '삼성 이건희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 조직 및 연대사업
- 비자금, 경영권 불법승계, 불법로비 진상규명 논평, 집회, 의견서 제출 등

조세개혁센터

● 총평

- 세금 바로알기 캠페인, 대선 조세정책 검증, 조세형평성 차원의 제도개선

등이 중심사업이었음

- 그러나 세금 바로알기 캠페인 또는 세금 폭탄론의 허구성을 깨는 캠페인은 센터내부의 확고한 사업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중단됨
- 대선 조세정책 검증과 일부 조세형평성 차원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활동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연장에 그침
- 전반적으로 사업을 기획, 진행하기보다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입장 표명에 그침
- 새로운 조세 의제를 발굴하거나 대선 정책대결 유발할 아이디어나 기획력 부족했으며, 실행위원 충원 등 전문성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함

● 주요사업

1. 조세형평성 관련

- 해외펀드 비과세 관련 - 해외주식 펀드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반대하는 논평, 의견서 제출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연장 반대,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반대 등 비과세감면 조항에 관한 반대활동

2. 부동산 세제 관련

-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논평, 성명 발표

3. 대선 조세정책 검증

- 대선후보자들에 대한 조세정책 질의 및 답변서 분석, 발표

II. 권력감시 분야

의정감시센터

• 총평

- 대선 일정이 물려 있어서 국회 활동도 미흡했고, 센터 활동도 입법, 상임위 활동보다 정세대응에 초점을 맞췄음. 국회 모니터 보고서 구성을 중요한 법안, 상임위 활동, 본회의 투표 결과 등을 통한 의원평가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연초 재래시장 리포트 발간 이후 민생 이슈에 대한 정당 정책 평가는 진행하지 못했음
- 유권자의 선거 활동을 규제하는 선거법에 대해 의제세팅을 하였고, 헌법소원 제기,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활동 등을 진행했음.
- 국회의원 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는 DB운영과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상반기 중에 회원 참여 프로그램 '유쾌한 정치토크'를 진행하면서 회원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였음. 참석자 수는 20-30명 수준이지만 토론이 내실 있게 진행되었음. 2008년에는 참가자 심층 평가 등을 바탕으로 형식, 내용의 변화를 도모하려고 함
- 대선사업 관련, 참여연대-한겨레 공동으로 '100인 유권자위원회'를 기획, 진행하였음. '정책평가' 운동 자체가 파괴력을 갖진 못했지만, 시민참여형 정책 평가 사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경험과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주요사업

1. 국회, 정당 모니터링

-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형마트 규제 관련 정당정책 평가리포트 발간
- 진보정치연구소 프로젝트로 '의정활동 평가 지표개발 프로젝트' 진행 중

2. 선거법 개정운동

- 중앙선관위의 선거UCC지침 전면폐기 및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활동 전개
- 유권자의 선거 활동 및 표현의 자유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관련, 6개 단체와 네티즌 193인 공동으로 헌법소원 제기
-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활동 및 관련 공익 소송 2건 진행
- 검찰과 법원에 선거사범 사법처리에 관한 의견서 제출

3.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 감시사이트 <열려라국회>는 일 조회건수 7,000건 전후를 유지하고 있고,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의원 정보와 의정활동 기록을 제공하는 DB사이트에서 참여연대의 성격을 강화하고 네티즌 참여 가능하도록 운영과 편집을 재편할 계획

4. 시민사업

- 회원 참여 프로그램 '유쾌한 정치토크'를 대선, 대학 등록금, 한미FTA, 공직선거법 등을 주제로 진행
- 참관기와 영상하이라이트를 통해 회원들과 사후 공유를 하였음
- 청년연수프로그램으로 모의국회 진행

5. 대선사업

- 참여연대-한겨레 공동으로 '100인 유권자위원회' 진행
- 후보별 대표공약, 일자리, 교육공약에 대한 대선후보 정책 워크숍 및 정동

영, 권영길, 문국현, 이인제 후보초청 토론회(혹은 간담회) 개최
- 유권자위원이 토론회 전후로 후보 공약 평가하여 최종 평가보고서 발표

사법감시센터

• 총평

- 새로운 활동주제와 방식을 개발하는 취지에서 고려했던 사법정보자료실 개설, 정기적인 대법원 판결 평가와 대법관 평가, 2기 사법개혁 주제 발굴을 위한 사법개혁 실태진단 및 평가 사업 등은 착수하지 못했음
- '변호사징계정보확인 사이트' 개설은 변호사윤리와 관련하여 법률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과 변호사윤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판결비평 활동이 3년째 유지해오고, 2007년 한 해에도 9건의 판결을 다루었지만, 시민 참여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시행을 위한 꾸준한 활동이 관련 법률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으나,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총입학정원제 그 자체 또는 잘못된 정원제 운영을 막아내지 못했음

• 주요사업

1. 판결, 수사 모니터 활동

- 판결비평 활동 지속, 집회참여원천봉쇄 판결, 주민소송 판결, 성희롱 해고

사건 판결, 불법파견근로 사건 판결, 정몽구 회장 사건 판결, 울산북구청 공무원 승진 사건 판결, 상지대 정이사 무효 판결, 교통불편 집회금지 판결, FTA협정문 초안비공개 사건 판결 등 총 9회 진행

- 김승연, 정몽구 재벌회장 사건 수사 및 판결 모니터

2. 사법개혁

-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대상 입법로비 활동,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총입학정원 설정 비판활동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대상 입법로비 활동

3. 법조윤리

-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변호사징계정보 확인시스템 마련
-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 퇴직후 비윤리적 사건수임 중지 온라인캠페인

공익법센터

● 총평

-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공익법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활동력 제고 노력은 상반기 동안 주춤했으나, 2007년 하반기에 진행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 대응사업이 전체 운영위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으로 센터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음
-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및 공익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 마련은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함. 인적구조의 취약성 보강을 위한 노력 더 필요

● 주요사업

1.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건 대응

- 피해조사 및 상담 등 법률지원 활동 진행
- 삼성중공업의 피해보상 및 복구노력 등 무한책임질 것을 촉구

2.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

- 85개 공공기관에 웹페이지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보장 건의문 제출
-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행정감시센터

● 총평

- 2007년 3월 맑은사회만들기본부를 계승하여 발족함에 따라 퇴직관료 재취업 제한을 요구하는 캠페인, 최기문 로비사건 대응, 공직자윤리법 입법청원 등 일련의 대응을 적절하게 하였음. 관료감시운동을 본격화하려 했으나 사회적 이슈화 부족과 내부 역량의 한계로 새로운 관료감시 사안을 발굴하지 못함
- 공직윤리 등에 대한 현안 대응은 일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년에 비해 대응력과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현안 대응체계의 보완이 필요함
- 정보공개사업단과 공익제보지원단은 행정감시센터로의 안정적 통합과 사업단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을 진행하였음. 자원활동가를 활용한 민원처리 활동 시작함
- 내부역량의 한계, 대선연대 활동지원으로 인해 하반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전체적으로 관료감시운동을 본격화하지 못하였음

● 주요사업

1. 관료감시 관련

- [관료감시 보고서] 경제 및 건설 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보고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발표
- 박병원 김종갑의 취업 승인 취소 요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퇴직공직자의 로비 금지 등의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청원 등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관련 사업 진행
- 김승연 사건 은폐 의혹, 검찰이 수사에 촉구 논평 및 성명 발표

2. 공직윤리/ 행정감시 등 현안 대응

-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공기업 감사 외유 관련 입장 발표
- 변양균 전 실장의 신정아 비호의혹 관련 대응
- 이규용 환경부장관 위장전입에 대한 대응
- 국세청 뇌물상납, 청와대의 공수처신설촉구 관련 입장 발표 등

3. 정보공개사업단

- 비밀관리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정보공개법 개정 TF에 참여
- 서울시 기록분실 관련 논평
- KBS 시사기획 '쌈'과 정보공개 공동기획 진행 중
- 세계일보, 국가기록원,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과 공동기획 '정보를 시민에게' 진행

4. 공익제보지원단

- 국가청렴위 위원장 인사 관련 논평 발표
- 공익제보길라잡이 개정판 자료집 출판작업 진행

III. 평화·국제 분야

평화군축센터

• 총평

- 2007년 센터는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여 대중적 평화운동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했음
- 평화담론을 풍부히 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평화국가' 연구모임이나 토론회는 상반기 중에 진행되다 진척되지 않았음
- 시민토론회, 영화보기 등과 같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시도자체는 호평을 받았으나 지속가능하지 않았음. 단 '평화학교' 경우 참가자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이나 참가자 만족도 면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음.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인력이 많이 투여되나 다시 기획할 만함
- 파병관련 모니터 및 파병연장 반대활동은 지속했으나 내외부적으로 동력이 소진된 상태임. 하지만 아프간 한국인 피랍 때 기획했던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이나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이해를 다룬 '한잘라를 만나다' 등은 신선한 평화행동 프로그램이었음
- 연대사업의 경우 가지 수는 많았지만, 파급력 없이 다소 자족적으로 진행되었음. 새로운 운동방식을 찾지 못한 채 관성적으로 연대활동을 했던 문제가 컸음

• 주요사업

1. '평화국가' 담론 확산 활동

- 평화국가 연구모임, 평화국가 만들기 컨퍼런스 진행

-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국내외 평화이슈들을 집대성한 '평화백서' 출간작업 진행

2. 시민참여형 평화운동 기획

- 평화 감수성을 나누는 '평화와 눈 맞추다'(2월) 행사, 3회에 걸쳐 시민 토론회 '시민, 안보를 말하다', 5회에 걸쳐 '영화로 보는 전쟁과 평화' 진행
- 대학생 대상으로 '평화학교 - DMZ에서 바그다드까지' 진행,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체험 시도. '평화열차' 타기 행사는 7월 평화의 달 행사 기획과 연계하여 임진각에서 회원행사로 진행
- 아프간 피랍사태이후 '한잘라(팔레스타인 난민촌 아이를 상징하는 만화 인물)를 만나다' 행사를 10여개 평화단체와 공동으로 진행,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돌아보고 분쟁종식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 연인원 100명 정도 참가

3. 이라크, 아프간 파병연장 반대운동

- 이라크 정세, 자이툰 부대 활동 모니터링 지속, 파병정책관련 정보공개 촉구 활동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
- 아프간 한국인 피랍 관련 시민평화환경종교단체 공동행동 진행, 피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호소문 유엔 고등판무관실에 발송, 피랍자 무사귀환과 아프간 평화 기원하는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 진행

4. 국내외 연대활동

- '평화의 섬 제주를 위한 공동행동'(가칭) 제주 해군기지 건설관련 집중 모니터 및 지속적인 입장발표, 하와이, 오키나와 활동가 초청 프로그램 진행
- 남북관계의 재인식과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 위한 전문가-활동가 연속 간담회(5차례) 및 워크샵 진행
- 남북 정상회담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군축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한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하는 공동성명 채택

- GPPAC(무장갈등예방을위한지구적파트너십) 동북아회의(5월 몽골), GPPAC 아시아 태평양 회의(6월, Peace Boat)참석, 국제 네트워킹 활동 지속
- 7.27 정전협정 즈음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7월 평화의 달' 행사 진행
- 2007 평화활동가 대회(12월) 준비단체로 기획 및 진행에 참여
- 미-인도 핵협정에 대한 외교부 질의, 공동성명 채택 등 국제적 대응에 동참

5. 대선 대응

- <2007 대선연대> 정책의제로서 군축, 파병부대 철수, ODA 확대 등을 제시
- 한겨레-참여연대 공동기획 차원에서 대선후보 질의 및 평가 발표 진행

국제연대위원회

• 총평

- 대체적으로 활동 목표에 따라 사업이 다각적으로 진행되긴 했으나, 여전히 충원되지 못한 실무 역량(1/2인)으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함
- 아시아 연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한 칼럼 연재, 포럼, 출판 기획 등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진 못했으나, 대중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 이후에는 치밀한 기획과 추진력이 필요함. 특히 출판은 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됨
- 아시아 각국의 권력 감시단체를 중심으로 연대 활동의 물꼬를 트기 위해,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의 현지 단체 방문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무처의 여러 사정으로 실행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음

- ODA(대외원조)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꾸준히 역량을 축적하고 사업을 점차 확대하면서 관심 확산과 공론화에 기여했으나,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정책 감시 활동이 요구됨

● 주요사업

1. 한국의 아시아 담론과 아시아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

1) 칼럼 <아시아 생각>

- 2006년부터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게재, 2007년부터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과 공동게재 중

2) 포럼 <우리 속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 아시아 칼럼과 주제를 연계하여 월례 포럼을 구상했으나,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과 적절한 강사 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매월 진행하진 못하고 4회로 그침. 주로 대학(원)생 등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 이후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중 기획이 필요함

2. 버마 민주화, 필리핀 정치 살해 중단 연대 활동

- 상반기 필리핀 총선 전후로 거리 캠페인, 뉴스레터 발행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하반기 버마 민주화운동 연대 활동에 단체들이 집중하면서 필리핀 활동은 거의 진행하지 못함
- 버마 연대 활동은 8888 민중항쟁 캠페인과 더불어, 하반기 군부의 버마 민중 탄압에 대응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을 결성, 참여연대도 실무 단체로 결합하여 집회, 캠페인, 모금(총 1,500만원) 등 활발한 활동을 함께 함

3. 출판 기획

- 버마 민주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나 총체적으로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가 없어 버마 도서 번역을 기획, 번역 자원활동가들 구성, 2008년 상반기 중 출판 예정

4.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대외원조) 감시

1) 주요 원조 공여국가의 원조 정책 연재

- 2006년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다룬 것에 이어, 2007년에는 주요 원조 공여국가의 정책을 주제로 실행위원과 소규모 연구팀을 신설해서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를 발행하여 연재

2) 외국의 ODA 감시 단체들과 교류

- 독일 에베르트재단과 공동으로 ODA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워크샵 개최
-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ODA 회의 참가, 국제적인 논의 흐름 파악

3) 대외원조 관련 법안 논의 감시, 대선 후보 정책 질의

- 항공기 연대 기금이나 대외원조 기본법 등 관련 법안 국회 논의 모니터링, 입장 발표
- 프레시안, 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대선 후보들의 ODA 입장 질의 및 평가 발표

※ 연대 기구 가입 현황 (2007. 12. 현재)

○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 1997년 발족. 사무국은 태국에 있음. 참여연대는 2000년 낙선운동 이후 가입
- 대체로 아시아 나라들이 선거 기간 중 많은 유혈 사태와 불법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국제감시단의 활동 필요
- 참여연대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선거 감시 활동에 참여한 바 있음

○ FORUM-ASIA(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 1994년 발족. 사무국 태국에 있음. 참여연대는 1997년 1월 가입함
- 대표적인 아시아 지역 인권 단체로 매년 10월 3주간 인권교육 진행
- 참여연대도 지난 10월 교육에 참가함

○ GPPAC(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 2001년 갈등예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촉구하는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권고문 27에 대한 응답으로, 2003년 유럽갈등예방센터(ECCP)가 제안하여 이루어진 국제 네트워크
- 평화군축센터가 GPPAC 한국위원회 실무간사 역할을 맡고 있음

○ APA(Asian Peace Alliance)

- 2002년 발족. 현재 아레나(ARENA)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지역협력을 논의하고자 설립
- 참여연대는 2003년 운영위원으로 참여

※ 2004년 참여연대는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취득, 유엔 회의에 참가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언할 수 있음

- 유엔 협의지위를 활용하여, 2005년 참여연대는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가, 북한 인권문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하여 의견 제출
- 2007년에는 시민단체 공동으로 북 인권 관련 의견서 제출

IV. 시민참여 분야

시민위원회

- 총평

-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팀제 개편과 실행위원회 구조 마련함. 회원팀, 시민교육팀, 홍보팀 신설하고 인터넷팀과 참여사회 제작팀을 포함해 시민참여분야의 인력과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팀제 개편 (2008년 시민참여팀과 교육홍보팀으로 분화)해, 실무진 교체와 통인동 이사라는 변화에도 큰 무리없이 진행됨
- 회원서비스는 기본적인 운영에 그쳤으나, 체계적인 회원관리/서비스 위한 기틀 마련해 가고 있음. 회원정보 관리 시스템 보완과 함께, 성실회원에 대한 감사와 후원 응답체계 등의 개선을 우선 과제로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는 중
- 회원행사는 통인동 이사로 횟수는 적었으나, 집들이와 창립기념식을 겸한 회원대동제 등 높아진 호응으로 활성화 가능성 확인함. 회원행사 외에 회원모임 활성화, 자원활동 지원, 교육강좌 마련, 집중 현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등 다각적으로 독려했으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함. 이 고민을 이어, 통인동 시대에 맞는 회원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1분액션', '통인동편지', '영상논평' 등 일부 의미있는 시도는 있었으나, 인터넷참여연대 개편이 늦어지면서 온-오프라인 매체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준비 작업에 그침. 개편이 마무리되는 2008년 2월부터 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혁신이 시작될 것임
- 시민교육 사업은 주경야독, 굿모닝 세미나 시리즈 등은 참여연대 대표적 시민강좌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도한 대중강좌와 인턴십/펠로우십 운영을

포함한 청년층 교육 모두가 성과를 남김. 시민교육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대표사업을 마련해가는 중

- 자원활동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 신청에서부터 오리엔테이션, 부서배치와 업무 관리 및 이후 피드백까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중.
- 홍보분야는 참여연대 비방 대응을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진행됨. 회원가입서, 연차보고서, 기타 홍보물 등 기본 홍보물 마련 중

● 주요사업

1. 회원행사

- 봄산행(5월), 회원대동제(9월), 송년의 밤(12월), 신입회원한마당(상반기 매월, 하반기 9월)과 고궁숲체험(6월) 등을 진행
- 참여연대 13주년 창립기념식과 '통인동 새 보금자리 회원 집들이'로 마련된 회원대동제는 250여 명 가량 참석. 회원행사 활성화 가능성 확인
- '삼성 이슈'에 대한 회원대토론회(11월)를 열어, 긴급 현안에 대한 공유와 토론을 통해 참여연대 주요 활동에 대한 회원참여 방안 모색. '삼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난 10년 활동'을 정리하는 안내문 등을 전체 회원에게 발송해 집중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연대 회원으로서의 자긍심 강조
- 회원모임 '참좋다' 10주년 기념공연 개최(9월, 대학로 노천극장)

2. 시민교육

- 공부하고 싶은 직장인을 위한 '주경야독' 시리즈: ① 조효제 교수의 톡 쏘면서도 달콤한 인권 이야기 (10월, 총4강), ② 88만원 세대를 위한 우석훈의 명랑경제학 (11월, 총4강)
- 주부를 위한 '굿모닝 세미나' 시리즈: ① 내 안의 창 힘껏 열어젖히기 -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역사 (10월, 총4강), ② 고병권의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11월 총3강)

- 20대를 위한 '시민운동 현장체험' 시리즈: ① 한미FTA, 괴물인가 선물인가 (3월-5월, 총11강), ② 희망+평화, 복지학교와 평화학교(7월, 총10강)
- 참여사회연구소가 주관한 상하반기 기획강좌 시리즈: ① 대한민국사, 5가지 쟁점 (5-6월, 총5강), ② IMF 10년, 한국경제 5가지 쟁점 (11월, 총5강) 등 곳곳에서 시민강좌와 토론회가 진행됨

3. 새로운 소통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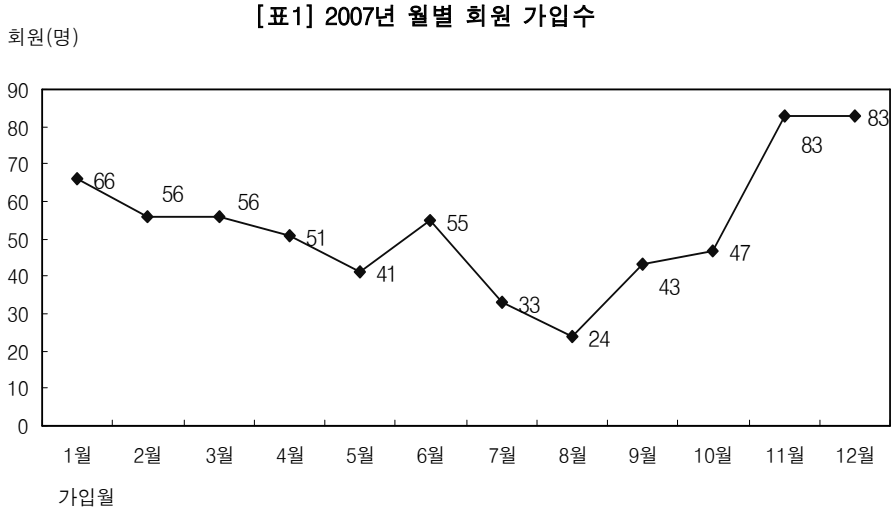
- 네티즌 '1분액션' 등 포탈사이트를 이용한 참여방법 개발, 피플TV의 '영상 논평' 시리즈 등 참여연대 컨텐츠의 접근방법 개선 등은 반향을 얻었던 유의미한 시도
- <활기차> '통인동 편지' 시리즈(2007년 하반기, 약15통)로 온기가 흐르는 따뜻한 방식으로 회원과 소통

4. 자원활동 활성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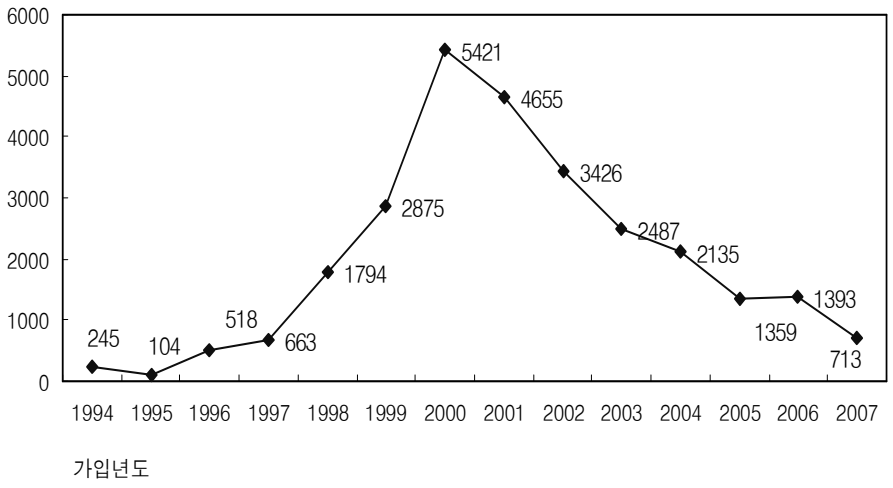
- 시민운동에 대한 중요한 시민참여 영역인 자원활동 활성화를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실현의 주요 과제로 삼고, 신청에서부터 오리엔테이션, 부서배치와 업무 관리 및 이후 피드백까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중
- 20대를 위한 인턴쉽/펠로우십을 마련해 2007년 12월부터 모집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약 30여 명 규모로 운영 중. 향후 청년층이 친근하게 시민운동을 접하고 체계적으로 체험/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연 2회 이상 운영 계획

※ 회원현황 (2007년 12월 말 현재 회원 : 9,738명)

[표1] 2007년 월별 회원 가입수



[표2] 연도별 회원 가입수



※ 2007 참여연대 시민교육 - 시민참여 사업 보고

시리즈명	강좌명	기간	주요 내용 및 강사	수강인원	주무부서
시민운동 현장체험	3기- 한미FTA, 괴물인가 선물인가	3/30~5/28 총 11강	참여연대 오리엔테이션/정태인 전비서관 이론강좌/홍기빈 박사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강의/송호창 변호사의 사회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찬반토론/직접행동 기획, 인사동 및 지하철 퍼포먼스 진행	13명	시민 교육팀
	4기- 희망+평화 복지학교 평화학교	7/2~7/23 총 10강	-복지학교: 거침없이 희망 UP! -평화학교: DMZ에서 바그다드까지 ※ 복지학교는 사회복지위원회, 평화학교는 평화군축센터에서 진행함 ※ 이후 시민운동현장체험 시리즈는 2008년 1월부터 인턴십/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전환	17명	
주경야독 시리즈	1탄- 톡 쏘면서도 달콤한 인권	10/8~11/5 매주 월 저녁7시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강의 1강 인권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다 2강 현대인권의 현실 3강 왜 인권의 비판이론인가 4강 인권민주주의와 권리와 정치	67명	
	2탄- 88만원세대를 위한 우석훈의 명랑경제학	11/13-12/4 매주 화 저녁7시	우석훈 경제학자 강의 1강-승자독식사회와 인질경제학 2강-왜 조직이 문제인가 3강-한국기업에게 던지는 조직론의 질문 Top 5 4강-20대를 위한 명랑경제학	20여명	
굿모닝 세미나 시리즈	1탄- 내 안의 창 힘껏 열어젖히기	10월 목 오전10시 총4회	정희진 (여성학자) 1강-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인권 2강-군사주의와 남성성 3강-어머니, 여성주의 4강-저자와의 대화	9명	
	2탄- 고추장 책으로 세상을 말하다	11월 목 오전10시 총3회	소수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제로 2회 세미나를 갖고 수유너머를 찾아가 고병권 촌장과 세미나 진행	6-7명	

기획강좌 시리즈	상반기- 대한민국사 5가지 쟁점	5/29~6/26 매주 목 저녁7시	1강-대한민국사 좌절인가 희망인가(한홍구) 2강-식민지경제 근대화론(허수열) 3강-박정희 시대는 무엇이었나(이병천) 4강-리틀 아메리카 vs 빅 스웨덴인가(신정완) 5강-분단체제의 미래와 동북아 평화(박순성)	약 30명	참여사회 연구소
	하반기- IMF 10년, 한국경제 5가지 쟁점	11/1-11/29 매주 목 저녁7시	1강-금융허브 (홍기빈) 2강-한미FTA (최태욱) 3강-재벌 개혁 (김진방) 4강-중소기업 (조성재) 5강-양극화를 넘어서(이병천)	15명+상근자11명	
유쾌한 정치토크		연4회	1회- 정치, 대선 (강원택) 2회- 대학등록금 (김태홍) 3회- 한미FTA (이해영) 4회- 공직선거법 (박찬표)	매회 약 20~30명	의정감시 센터
시민, '안보'를 말하다		상반기 총3회 (3월-6월)	양심적병역거부와 안보/ 평택미군기지이전 문제/제주 군사기지 건설 문제관련 토론 진행	20명 내외	평화군축 센터
영화로 보는 전쟁과 평화		총5회 (5월-8월)	'경계를넘어'와 공동 진행, 총 5회 진행 (노맨스랜드/묵공/거북이도 난다/칸다하르/어떤나라)	15명 내외	
평화열차 타기 행사		7/22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한반도 분산현실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임진각역까지 평화열차 타기 진행	회원 50여명	

2007년 연대사업 보고

• 총평

- 집중 연대 과제 중 한미FTA 저지 운동은 지난 2년 간 참여연대가 한미FTA저지범국본의 대외협력팀을 맡아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벌임. 반면에 이라크 파병군 완전 철수운동은 사안이 장기화되면서 내외적으로 동력이 소진되어 연대 활동이 힘 있게 진행되지 못함
- 대선 정책 운동은 애초 집중 연대 과제는 아니었으나, 전국 3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에서 참여연대가 집행위원장 단체로 참여하고 실무진을 파견하면서, 사실상 집중 연대 활동을 펼침
- 한편, 2007년에 새로 가입한 연대 기구들은 거의 대부분 부서별 활동에 따른 연대 활동으로, 이처럼 실질적인 역량 투입과 분명한 역할 설정 없이 이름만 거는 연대 활동은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 주요사업

1. 집중 연대 과제

○ 한미FTA 저지

-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을 연결하여 여야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국회비상시국회의의 구성을 이끌어내고, 50여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일에도 산파 역할을 함
- 또한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인 의정대책단을 구성하여 한미FTA와 상충하는 국내 160여개의 법률 목록을 발표, 한미FTA가 입법적인 측면에서 국민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헤침

- 이외에도 한미FTA가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 분야별로 한미FTA의 문제점을 발표하여 쟁점을 새롭게 발굴, 사회적으로 한미FTA의 영향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함
- 협상 타결이후에는 협정문의 조속한 공개 촉구운동, 한미FTA 협상결과 종합평가보고서 제작, 졸속 추진과 피해 대책 부실을 따지기 위한 국회청문회-국정조사-국회발의 등을 추진하는데 앞장 섬

○ 이라크 파병군 완전 철수 운동

- 집중 연대 과제였으나, 사안이 장기화되면서 연대 활동이 약화됨. 기존에 참여연대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파병 정책 전반과 자이툰 부대 활동 모니터링, 국회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 촉구나 국회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등은 꾸준히 진행함. 이외 아프간 한국인 피랍 문제로 이라크 외 아프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아프간 지역재건팀 파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

○ 대선 정책 캠페인

- 교육, 복지, 녹색, 평화, 경제, 여성, 지역 발전 분야의 7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 채택 운동을 벌임
- 교육 정책, 비정규 대책, 사회적 일자리 등 민생 대책을 찾기 위해 표적 집단 면접(FGI) 방식의 유권자 토론 모임을 열고, 유권자 운동 차원에서 미디어다음과 공동으로 1,000개 생활 공약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
- 2007대선시민연대가 시민사회 각 분야의 정책 과제 중 핵심 과제를 도출하여 공통의 비전을 정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음. 아울러 대선후보에게 시민사회의 비전과 대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 것은 평가할 만 함

2. 관심 연대 과제

○ 사립학교 재개정 반대

-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4대 개혁법안 중 그나마 유일한 개혁입법으로 평가받은 사립학교 개정안이 미처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사학 재단, 보수 종교 단체들의 끊임없는 재개정 요구로 7월에 재개정됨

○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정 저지 운동으로 2년 가까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법안들이 계류된 채 논의되지 않고 있다가, 하반기에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 간신히 정보위 전체회의의 무산을 이끌어 위기를 넘김.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임

○ 수도권 과밀 집중 문제

- 수도권 과밀의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기구 발족. 참여연대는 중요한 의제로 판단하고 공동집행위원 단체로 참여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등 공동 활동을 벌임

○ 양심에 다른 병역 거부 대체입법

- 하반기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 허용 방침을 발표. 이후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함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법보다는 국방부의 대책을 촉구했고, 이후 국방부 안은 수용하기에 부족하여 2008년 다시 특별법 제정운동을 시도하려고 함

○ 6월 민주항쟁 20주년 사업

- 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 계승 민간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 공동선언, 계승대회, 범국민 대행진 등을 진행함

○ 사행산업 규제

-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9월 출범한 것은 성과. 이후 감독위원회의 활동을 주시할 필요 있음

○ 6.15 공동위의 남북 교류행사

-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발맞추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 통일운동에서 먼저 6.15 통일 대축전 공동행사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가교 역할을 함. 이후 10. 4 남북 정상선언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함
- 참여연대는 6.15 남측위원회에서 정책 조율 역할을 맡음
- 6.15 행사 전후해서 야당 인사 자리 배치를 둘러싼 논란으로 본 행사가 이틀 지연되는 진통이 있었고, 이는 남북 교류 협력의 원칙에 대한 남측위 내부 논란으로 이어짐

※ 연대 기구 가입 현황 (2007. 12. 현재)

○ 참여연대 공동체

- 대구·경기북부참여연대 ※ 울산은 해산

○ 상설 연대기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한시적 연대, 대책기구

-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테러방지법제정반대 공동행동,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3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센터설립추진위원회, 수도권 과밀 집중 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부서별 연대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사법감시센터), 반핵국민행동(평화군축센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평화군축센터),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평화군축센터),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화군축센터),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평화군축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설 아시아엔지오센터(국제연대위원회), 최저임금연대(사회복지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사회복지위원회), 한미FTA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대책위(사회복지위원회), 한미FTA 저지를 위한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참여사회연구소)

○ 2007년 가입 기구

-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 모금
- 허세욱열사추모사업회(준)
-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경부운하 반대를 위한 연석회의의 후신)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 2007
-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 의료의공공성과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원회

-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무주택자 보호지원■주거의 공공성 실현)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원회
- 2007 대선시민연대
-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 삼성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

※ [참고] 일회성 행사를 위한 기구 참여
- 3.8 세계여성의날기념 제23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100주기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조직위원회, 87년 6월 항쟁 20주년 계승 민간조직위원회, 7월 평화의 달 행사 공동추진 네트워크, 제4회 재외동포NGO대회 추진위원회, 2007년 대한민국 사형폐지 국가 기념식 준비위원회, 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행사위원회, 2007 한국사회포럼

○ **한시 연대기구 결성 후 해소** (장기간 활동 중지 기구 포함)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 서울YMCA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정상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청계천 전태일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 기록물관리제도개선네트워크
- 사회단체보조금네트워크
- 언론개혁국민행동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조직 전환 후 해소)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원회

2007년 부설기관 보고

참여사회연구소

- 총평

- 적절한 주제기획을 통해 상하반기 심포지움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연대 내외부 공동 주최 토론회도 비교적 성공적이었음. 다만, 자체 토론회 기획은 약화된 측면이 있음
- 규범기반 프로젝트 무산으로 인해 공공성을 주제로 한 일상적 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고, 공공성 연구모임도 산발적으로 진행되는데 그침. 다만, 『시민과 세계』 공공성 주제기획은 공공성 연구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상하반기 기획 강좌를 진행하였고, 두 권의 단행본을 발행하는 등 교육, 출판 사업을 통한 대시민 활동을 강화한 것은 성공적
-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는 안정적인 제작 단계에 안착하였음. 편집방향과 편집기획 시스템의 체계화가 향후 과제로 남음

- 주요사업

1. 심포지움, 토론회 개최

- 적절한 주제기획(한국경제의 공간구조, 세계화시대 관료독주)으로 상하반기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심포지움을 진행,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과 세계] 원고 구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
- 사회복지위원회 및 타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사회투자국가,

한미FTA, 삼성)도 성공적이었음
- 심포지움 이외에 자체 토론회(대선)는 한 차례 진행에 불과, 자체 토론회 기획은 약화

2.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 발간

- 2007년 한 해 동안 3호(5주년 기념호, 11호, 12호)가 발행되는 등 안정적 제작 기반은 확보됨. 발행 이외에 장기 구독자와 도서관 구독 확대 등 체계적인 구독자 관리 필요
- 안식년 등으로 일부 편집위원의 참석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집위원회가 나름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 다만, 편집기획에 있어, 다른 잡지 모니터링이나 담론 동향 모니터링을 토대로 편집위원회의 논의력을 강화하는 체계가 필요

3. 단행본 출판

-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6월), 『세계화시대 한국자본주의』(9월) 등 두 권의 단행본을 발행하였으며,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의 경우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로 선정되었고, 2달 만에 2쇄를 발행함
- 두 권의 단행본 발행을 통해 추가적인 출판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4. 기획 강좌

- 상반기 [대한민국사 5가지 쟁점], 하반기 [IMF 10년, 한국경제 5가지 쟁점] 진행
- 상반기 역사 강좌의 경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서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하반기에 진행된 한국경제 강좌의 경우, 강좌 주제에 어려움을 느껴 수강자가 많지 않았음
- 두 차례 강좌 교육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교육사업의 가능성과 의미를 확인하였음

5.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모임

- 경제사회정책 연구모임과 공공성 연구모임의 경우 몇 차례 산발적으로 진행된 이후에 동력을 상실하였음. 구체적인 모임의 상과 목표 설정이 필요

2007년 감사보고

2007년 사업감사 보고

○ 사업감사보고 : 김영희(변호사)

2007년 활동방향에 비추어 본 참여연대 사업평가

1. 사회경제개혁 분야

- 민생희망캠페인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은 특히 연 66%의 등록 대부업체 이자를 49%, 미등록 업체는 30%까지 인하하는 성과를 만들었으며, 대부업 방송광고 규제와 정부의 대부업체 단속· 점검 강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며,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운동, 사교육비 실태 보고서 발간 등 사교육비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국민연금 개혁,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운동,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및 경영권승계 불법규명을 위한 국민운동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참여연대가 양극화해소와 민생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을 가장 중요한 활동 방향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경우 보고서, 제도개혁안 제출 외에 효과적인 사업수단을 개발하지 못한 것은 부족하였다고 보며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독점 담합 사례조사 및 공익소송은 좋은 기획의도에 비해 실천적인 면이 아쉬웠고, 조세정책개혁 캠페인의 경우에도 주어진 과제에 비추어 정책 및 대안 개발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2. 권력감시 분야

- '유쾌한 시민정치토크'의 경우 참신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이었고, '열려라 국회', '100인 유권자위원회', 유권자의 선거자유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 사법감시 분야의 판결비평 등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의정활동 평가 지표개발 프로젝트',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활동, '변호사징계정보확인 사이트',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대응사업, 퇴직관료 재취업 제한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최기문 로비사건 대응 및 공직자윤리법 입법청원 대형마트 규제 사업 활동, 2007 대선연대활동 등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다만 민생 이슈에 대한 정당 정책 평가가 부족하며, 사법정보자료실 개설이나 정기적인 대법원 판결 평가와 대법관 평가, 사법개혁 실태진단 및 평가 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봅니다. 판결비평 활동의 경우에도 사회적 영향력 제고라는 면에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며,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해서 보다 영향력 있는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공익소송의 확대, 관료감시센터 및 정보공개사업단의 적극적 운영도 필요하며,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에 비추어 공익제보지원단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평화군축과 국제연대 분야

- 한미FTA 관련 활동으로 국회의원 반대그룹의 외연을 확대하고, 한미FTA 특위 모니터링, 협상의 과정,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합니다. '평화학교', '평화열차' 파병, 평화활동가워크샵 등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며, 평화백서는 한국 평화운동의 의제와 활동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있다고 봅니다.

- 다만 한국군 파병관련 일상적 모니터 이외에 집중 모니터링 사업이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부족했다고 보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7월 평화의 달 행사, GPPAC 등의 활동 및 '남북관계 집중토론' 기획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4. 시민참여 분야

- 회원관리 사업에 있어 주어진 인력과 자원 내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보며, 꾸준한 회원행사, 청년연수 프로그램, 패러다임 강좌, 대상별 강좌(직장인, 주부, 퇴직자 등) 시도, 자원활동 운영 체계 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 마련,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회원모임 활성화 지원 인터넷참여연대 운영, 뉴스레터, 1분액션, 영상논평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 다만 회원행사의 참석률이 지나치게 저조한 점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쉬우며, 시민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참여연대 사이트 방문자가 줄어들고 있는 점, 참여사회 기사의 참신성 부족, 다양하지 못한 메시지 전달방식 등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2007년 회계감사 보고

○ 회계감사보고 : 윤형근 (회계사)

○ 회계기간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007년 재정 및 회계감사 보고

• 총평

- 2007년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회비수입이 전년대비 적지 않은 비율로 감소되었다. 이는 회원 수의 감소로 기인하기 보다는 2006년도 재정확충계획 '희망1번지 프로젝트(백년지기, 회비 한 번 더 내기, 회비증액 등)'를 통한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 증액분을 2007년도에 잘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회비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니 만큼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 복식부기에 의한 월별 회계는 전년도에 이어 일부 외주방식으로 진행,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내부 회계 흐름을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회계 외주는 급여 및 세무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부문별 평가

1. 수입부문

- 회비수입은 약 9억 8천여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9% 감소되었다. 참여

연대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하여 2008년도 회비는 10% 이상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기 후원금 수입은 2007년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특별 후원금으로 이는 모두 보금자리 건축 비용으로 전액 지출되었다. 기타의 수입은 회비수입과 후원금 등의 규모를 감안해 다른 수입내역과의 평면적인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하겠다.

2. 지출부문

-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계정 과목에서 전년도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었던 안국동 사무실 임대료를 2007년엔 임차료(통인동으로 이사하기 전 안국동 사무실 임대료)로 계상하였으며, 건물관리비는 본연의 계정 분류에 맞게 사무실 유지관리비용 실비를 반영하였다. 그 외 보금자리 이전과 관련한 내부 시설 장치 및 용품구입비 3천여만 원은 유형 자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수선비와 사무용품비로 계상하였다.

3. 회계처리

- 2007회계연도 회계처리는 외주방식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단, 급여 및 각 종 세무신고 등 회계 처리 중 일부가 이원화되어 회계 통합 관리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회계 관리를 위해 내부 정책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울러 2008년에 계상된 토지 및 건물 등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향후 회계처리 방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안건 I

2008년 사업계획안 승인

2008년 참여연대 5대 활동 방향

2008년 참여연대의 다섯 가지 희망 만들기

1. 재벌중심 토건국가를 넘어, 동반성장의 복지국가를 향한
   - 민생의 희망 만들기

2. 정·관·경 유착과 부패에 대한 입체적 감시
   -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희망 만들기

3. 한반도 평화군축, 아시아 평화연대를 통한 평화국가 만들기
   - 한반도 동북아 평화의 희망 만들기

4. 시민의 언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는 시민운동
   - '새롭게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참여연대 희망 만들기

5.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
   - 시대의 좌표 세우기, 진보의 희망 만들기

1. 재벌중심 토건국가를 넘어, 동반성장의 복지국가를 향한 - 민생의 희망 만들기

•활동기구

민생희망본부, 노동사회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공익법센터

•주요사업

1.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및 삼성의 사회적 책임 촉구

○ 삼성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촉구
- 이건희 회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 요구
-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의 불법, 직무유기 책임추궁

○ 삼성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추진
- 이건희, 이재용의 법적 책임 및 구조본부 해체, 지배구조 개혁 촉구
-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삼성의 무한책임 요구, 피해자 법률구조 운동
- 삼성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한마당 추진

○ 삼성의 사회지배 보고서 (가칭) 「삼성과 관료」 기획, 발간
- 삼성과 관료에 의한 정책왜곡, 실패사례 중심의 보고서
- 경제관료 감시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2. 망국의 길 '한반도 대운하' 추진 저지

○ 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운동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주요 단체로 참여
- 대운하의 허구성, 비경제성에 대한 정책적 문제제기와 대시민 홍보, 캠페인
- 대운하 반대 국민 평화행진, '생명의 강' 지키기 문화 축제 등 직접행동

○ 대형국책사업의 경제성, 투명성에 대한 집중감시

- 행정감시 운동의 주요 사업으로 대형국책사업에 감시운동 추진
- 대형국책사업의 예산낭비 및 관경정학 유착 실태에 대한 집중 모니터 및 감시활동
- 한반도 대운하 관-경-정-학 유착보고서(가칭) 발간 추진

3.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경제노선 및 경제·금융정책 후퇴 비판, 감시

○ 금산분리 완화(은행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금산법 등) 시도 저지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시리즈 비판리포트 발간, '금산분리와 재벌 지배구조'/ '금산분리와 공적 금융기관 민영화' 등
- 국회 관련법 개악시도 모니터 및 법개악 저지 운동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지주회사제도 요건완화 등에 대한 대응

4. 영세상인, 중소기업 문제의 대안제시 및 균형 있는 경제 살리기 촉구

○ 대기업 중소기업 불공정 관계 개선을 위한 운동의 기반구축

- 대기업 하도급 부조리 및 담합 피해사례 수집
-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고발, 피해소송 등 적극적 피해구제 및 지원
-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영입, TFT 구성(경제, 민생), 제도개혁방안 마련

○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의 피폐를 가져오는 편향적 경제정책 모니터, 비판활동

- (가칭)<대기업 경제력 집중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발간

○ 재래시장 활성화, 대형할인마트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혁 추진

- 지역단체 및 지역 상인들과의 결합, 공동운동 추진

5. 사회공공성 확대, 삶의 질 향상운동

○ 교육, 주거, 의료의 가계부담의 완화를 통한 민생안정 실현

- 3대 가계부담(교육, 주거, 의료) 완화 중심으로 민생 살리기 운동 지속 추진
- 대학등록금 문제해결 및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유지에 2008년 활동 역량 집중
- 이명박 정부의 서민가계비 30% 인하 공약이행 촉구 및 허구성 폭로, 지적

○ 의료, 복지서비스 시장화 비판, 공공성 확대 추진

-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일련의 의료 시장화 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감시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관리기전 마련 등 의료 공공성 확대 추진
- 복지 바우처 확대 등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추세에 대한 모니터, 정책비판

○ 연금, 공공부조 등 소득보장정책의 확충 및 후퇴 감시

-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 추진
- 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생계비 결정방식 개선 추진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권리 찾기 운동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제도개선 추진
-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발간
- 근로기준법 바로 알기, 체불임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받기 캠페인 추진

2. 정·관·경 유착과 부패에 대한 입체적 감시
-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희망 만들기

●활동기구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행정감시센터

●주요사업

1. 국회/ 정당/ 의원에 대한 밀착감시 및 모니터

○ 국회 및 정당 모니터 강화

- 신정경유착-재벌중심 경제금융정책, 한반도 운하,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한 집중 모니터 및 평가 활동
- 주택, 교육 문제 등 각종 민생정책에 대한 정당, 의원별 입장의 알기 쉬운 대비, 비교 평가
- <정당정책 비교 리포트>(가칭)의 정례화 및 주요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재구성

○ 의원모니터의 체계화

- 경제, 금융, 교육정책 등 이해관계가 명확한 분야의 의정활동 내용과 의원 후원금, 겸직 등을 연동해서 평가하는 모니터 체계 확립
- 겸직, 후원내역, 부패전력 등 기본모니터를 강화하고, 모니터 보고서 및 열려라국회 등을 통한 DB 구축

○ '열려라국회' 사이트의 확대재편

-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시민참여형 DB 사이트로 확대재편
- 각 당 주요 현안 및 모니터 과제에 대한 입장 DB 구축
- 참여연대 국회/ 정당/ 의원 모니터 결과를 중심으로 사이트 편집

2.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검찰, 법원'에 대한 감시-사건, 인사 모니터 및 제도개혁

○ 상설 특검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요구

- 이명박 정부의 상설특검 공약이행 촉구활동
- 검찰의 권력,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문제제기

○ 검사, 법관의 퇴직후 활동 감시 및 모니터 보고서

- 2004년 법관 및 검사 퇴직후 변호사 개업실태, 2006년의 대형로펌의 퇴직 판검사 영입실태 조사 보고서의 후속 모니터 보고서 발간

○ 법관, 검사의 인사이동 및 사건처리 모니터

- 헌재, 대법원 등 각급 법원과 검찰청 인사에 대한 모니터 및 의견개진
- 법원판결, 검찰의 사건 수사에 대한 모니터 및 비판활동 지속

3. 새로운 권력감시 - 관료감시에 역량집중

○ 관료감시 DB '관료감시 위키피디아'(가칭) 구축

- 고위관료 1,000여명에 대한 재산현황, 보직경로, 담당 직무와 정책, 감사 지적사항 등 자료 수집
- 시민들이 자료의 접근, 검색, 평가, 활용할 수 있는 DB 구축
- 2008년 10월 DB 오픈을 목표로 자료수집 및 가공

○ 정-관-경의 개발동맹 실체 드러내기- 대형 국책사업 집중감시

- 예산낭비, 환경파괴, 지역공동체의 훼손을 가져오는 대형 국책사업에서의 정-관-경 유착에 대한 집중감시
- 한반도 운하,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세금 낭비하는 민자도로, 지방공항 등 담당 관료 및 연계된 정경유착의 고리에 대한 집중감시
-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세력(정치집단, 관료, 학계인사, 건설회사, 지역토호) 리스트업, 정책실패 경보를 내리는 관료감시운동 추진
- 한반도 대운하 정-관-경 카르텔 보고서 발표

3. 한반도 평화군축, 아시아 평화연대를 통한 평화국가 만들기

●활동기구

평화군축센터, 국제연대위원회

●주요사업

1. 통일외교안보정책 감시 및 대안적 정책방향 제시

○ 신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 냉전적 한미(일) 동맹 강화 조치, MD(미사일방어체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한미공동군사작전계획,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
- '평화국가' 지향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공론화, 활동가 워크샵 및 포지션 페이퍼 발표

○ ODA(대외원조) 정책감시

- ODA 확대 등 비군사적 국제평화 기여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PKO(평화유지활동)법안 적극 대응
- ODA 법제 및 정책관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 아시아 나라별 ODA 보고서 발간

2. 국방정책 감시 기반 구축

○ 국방정책 감시

- 국방개혁 2020 재검토, KHP(한국형헬기사업) 등 국방중기계획 등 국방현안 감시

- 한미군사동맹 강화 조치 대응

○ 한반도 군축의제 마련 및 인적 역량 구축

- 한반도 위협 평가, 남북 군사력 연구 등 연구세미나 진행
- 한반도 군축의제 및 과제 정리
- 연구 모임을 통한 국방 전문가, 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 센터 모니터링 틀 및 역량 구축

3. 국제 평화연대와 소통 강화

○ 아시아 연대와 소통 강화

- 아시아 담론 확산과 아시아 현안 이해를 위한 연중포럼 진행
- 분단정부 수립 60년, 일본 평화헌법 제정 60년 한일평화교류 프로그램 기획
- 평화활동가 대회를 통한 아시아 활동가 교류 확대

4. 대중적 평화운동 지평 확대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 한반도와 동북아 이슈에 대한 이해와 체험 중심의 '평화학교' 개최
- 국제연대에 대한 이해와 교육 중심의 '국제학교' 개최

○ 출판 기획

- 평화백서 발간(2~3월), 영문, 일본어판 발간
- 버마, 아시아 인권옹호자 등에 대한 출판사업

4. 시민의 언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는 시민운동
- '새롭게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참여연대 희망 만들기

•활동기구

시민위원회

•주요사업

1. 운동방식의 전환과 쇄신

○ 참여연대 운동방식의 재검토와 정비

- 보도자료, 논평, 성명 일변도 활동 방식의 다양화
- 보다 풍부한 얘깃거리와 담론을 회자시키는 운동방식(블로그, ucc 등) 개발
- 입법청원, 정보공개청구 등 정형화된 활동을 시민 직접참여 방안으로 쇄신
- 과거 소액주주운동, 1인 시위와 같은 새로운 운동수단, 방식의 적극적 개발

○ 시민적 이해와 여론 형성을 위한 직접소통 및 설득의 강화

- 시민 여론의 형성을 위한 직접소통 분야의 적극적 개발
- '유쾌한 정치토크'와 같은 시민의 눈높이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업 강화
- 시민운동, 참여연대의 이슈와 관계된 현장과의 접촉 확대, 비정규 노동자, 영세상인, 중소기업인, 학부모, 대학생 등 운동이슈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2. 대 시민 홍보·커뮤니케이션 강화와 혁신

○ 참여연대와 시민의 거리를 좁히는 적극적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잘못된 비판이나 오해 불식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
- 「참여연대 보고서」 등 악의적 비방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대응

-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리포트 발간

○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기획 및 통합전략의 수립

- 참여연대의 각 활동기구와 온오프라인 매체를 망라해 통합적 메시지 관리
- 인터넷, 동영상, 기관지 등 여러 매체들의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다각적 매체전략 수립
- 정책 컨텐츠의 질을 높이고 생산된 컨텐츠의 다양한 활용 시도
-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기존 매체를 능가하는 신매체 활용의 적극화

3. 회원 서비스 강화 및 회원 확대 추진

○ 맞춤형 회원서비스 도입, 실행

- 소극적인 회원관리 개념의 서비스가 아닌, 적극적인 회원만족을 추구하는 서비스 추진
- 일상적 전화안내/ 성실회원에 대한 감사인사 정례화/ 회비내역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 회비중단 회원에 대한 후원재개 설득전화 등
- 회원의 문의 등에 대한 응답체계의 신속화

○ 회원교육, 시민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 회원모임 확대와 활성화
- 월례특강 등 회원서비스 프로그램 재가동
- 주경야독, 굿모닝세미나, 청년연수 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추진

- 참여연대의 가치와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원확대 추진
- 기존 임원, 회원, 상근자들의 적극적 역할 및 맞춤홍보
- 임원, 회원, 상근자, 자원활동가가 함께 참여하는 회원확대 TF 구성 등

○ 재정기획위원회의 역할강화

- 재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전략수립 및 집행
- 재정적 기여와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는 '후원모임'구성
- 후원의 밤 이외에 중소형 후원행사 기획

5.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
- 시대의 좌표 세우기, 진보의 희망 만들기

●활동기구

연대사업팀, 참여사회연구소

●주요사업

1. 사회운동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

○ 진보개혁 진영 내 공식, 비공식 대화와 소통의 매개자 역할 확대

- 시민운동의 혁신과 진보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대화모임, 교류모임 활성화
- 시민운동, 민중운동, 노동운동, 지역운동, 각종 싱크탱크 등의 교류를 통한 인적, 정책적 연대활동 기획추진

○ 한국사회포럼, 시민운동가 대회 등 공식 소통의 장에 적극 참여

- 진보운동의 위기상황에 맞는 논쟁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

○ 연대운동의 관성극복 및 전략적 연대사업 중심의 역량집중

- 기존의 이름뿐인 연대사업, 연대기구에 대한 정리, 정비
- 대운하, 삼성 등 예상되는 대형 연대사업에 대한 참여연대의 역할설정, 역량투입
- 이름걸기식 연대사업을 넘어 재벌중심 토건중심 경제노선,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주의 확대에 대응하는 전략적 연대에 주력

2. 진보의 비전과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틀 모색

○ 시민적 진보를 위한 정책적 협력체계 강구

- 5년, 10년을 내다보는 진보의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갈 네트워크 모색
- '시민적 진보, 합리적 진보' 범위로 포괄할 수 있는 지식인, 사회운동가들이 논의, 협력하는 네트워크 형성

2008년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Ⅰ. 사회경제 분야

민생희망본부

- 2008년 활동목표

○ 등록금 인상 억제와 등록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가계부담 경감 실현 등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의 성과 확보
○ 서민경제 보호사업의 강화, 공기업 민영화 대응 등 운동 영역의 확대
○ 민생문제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 기획 및 진행

- 주요사업 계획

1.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 교육비

○ 등록금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공론화(1월~2월 초), 참여연대 - 경향신문 공동 기획 진행,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I 발표 및 입법청원
- 등록금 인상 및 운영의 적절성 여부 조사(1월 말~2월 초), 대학 등록금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II 발표, 등록금 인상 상한제·등록금 심의회 설치·등록금 회계 독립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
- 전국적 규모의 '등록금 네트워크' 추진 및 공동행동

○ 사교육비 모니터

- 새 정권의 교육 정책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실태 모니터
- 학원비 상한제, 수강료 초과징수시 반환청구권 인정,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징수 방지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

2.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 주거비

-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분양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및 대응
-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촉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택지공영개발에관한특별법 제정 등 후속 활동 지속
- 주거복지 분야사업과 결합하여 임대주택법 개정, 국가인권위 및 UN에 주거기본권 관련 제안 활동

3. 서민경제

- 폭리 상한선을 연 20%로 제한하고, 등록 대부업의 경우 특례 금리를 허용하더라도 연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 대부업체와 다단계·방문판매 업체들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강화, 대부업법 개정,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등 제도개선 활동 전개
- 금융기관의 서민대출 확대 및 서민금융 전담 국책은행 설립 요구, 금융기관공공성강화에관한법률 제정 촉구 등 금융 기관의 공공성 강화 활동 추진

4. 공기업 민영화 관련 공공요금 인상 대응

- 모든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기보다는, 원칙적 반대 입장 하에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사례별로 집중 검토하여 운동 전개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초래할 주공 및 토공의 민영화 반대 활동
- 전력·가스·주택공사·도로·철도·지역난방 등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대응

5. 연간 언론 캠페인

- '2008, 국민고충제로캠페인'(가칭) 언론, 포털 사이트와 연중 공동 기획
- '새 정부가 해결해야 될 국민 고충'수집, 제도개선안 제시 활동

6. 시민들과의 일상적 접촉 강화

-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소통, 현장성 강화하는 캠페인 기획
- 2007 '1000개 생활공약 모으기 캠페인' 후속 사업으로 베스트 생활공약들의 현실화 추진

노동사회위원회

• 2008년 활동목표

○ 노동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안적 담론과 정책방향의 모색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제도개선 추진
○ 절대 다수의 미조직 취약노동자에 대한 시민운동 차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 대변 활동 진행
○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지표개발 및 평가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공론화

• 주요사업 계획

1. 집중 모니터 과제

- 비정규직보호법 개선

- 편법도급·용역전환 규제 장치 마련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2. 비정규직 권리 찾기 캠페인

- 취약계층 노동자 집단인 건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일용직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 정비 촉구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고발
- 고용보험 가입운동,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집단 청구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3.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실태 조사 및 보호정책 개발 연구

- 청년실업, 노령, 간접고용 등 취약노동자 표적집단 면접(FGI) 추진
-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추진

4. 노동부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표개발 및 평가사업 추진

-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지표 개발 및 기업 평가
- 공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개 법제화 운동 추진
-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좌 기획

5. 노동행정 감시

- 공공부문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모니터링
- 노동부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사회복지위원회

• 2008년 활동목표

○ 시장-경쟁 대항담론 개발 및 장기적인 한국복지체제의 대안 담론 마련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전반의 공공성 강화, 저지를 넘어 적극적 대안 운동
○ 복지학교 등 시민교육사업을 통해 복지 지지층 확보
○ 사회보장체계 개편안 마련 및 공론화

• 주요사업 계획

1. 대항담론 개발 : '복지국가를 이야기 합시다'

- 차기정부의 시장경쟁 담론에 맞서는 대항담론을 개발해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함으로써 '한국적 복지국가'를 위한 모델 구축
- 대항담론 TF 운영
- 2차 대안복지 패러다임 세미나 진행
- 사회복지위원회 센터 블로그를 연중 캠페인의 장으로 구성

2.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집중 사업

- 시장,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성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핵심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업을 배치해, 공론화 및 대중 캠페인 진행

○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및 질 좋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대안 마련을 목표로 현장 단체와의 소통과 연대, 전문가 조직을 통한 사회서비스 대응 전략 마련

○ 보건의료 : 국민 건강권 확보를 목표로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일련의 의료 시장화 정책에 대한 모니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 비급여 관리기전 마련 등 의료 공공성 확대 요구

○ 보육정책 :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대비 30% 확충 계획 지속적 모니터, 보육료 자율화 저지, 아동수당제 입법안 제출

○ 올바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써 제대로 기능도록 하도록 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 마련 및 제도 시행 모니터

3. 복지학교 운영

- 장기적이고 정례화된 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권리로서의 복지를 공론화하고 복지운동의 지지기반을 확대함
- 희망 UP! 복지학교 : 대학생 대상으로 강의, 현장체험, 캠페인 등 진행
- 희망복지아카데미 :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으로 사회복지 주요현안에 대한 세미나 진행, 지역복지단체 순회 프로그램도 고려
- 색깔 있는 복지개론서 발간 : 진보적인 이념과 철학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의 역사와 이념, 각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엮은 단행본 출간

4.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

○ 연금제도 개혁 : 적절한 수준의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을 목표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모니터 및 개정 촉구,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상설화를 위한 활동 전개

○ 공공부조 개혁 :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여론화 및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목표로 4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활동 모니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모니터

○ 총선 대응 : 복지정책 의제화 및 복지확충 당론화를 목표로 각 정당 복지

공약 집중 분석,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08 총선 복지공약 발표, 지역복지 네트워크와의 총선 연계전략 추진

5. 기타

- '신정부 복지정책 방향 보고서' 발간 :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보고서 시리즈로 발간,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 자료로 활용
- '사회권 보고서' 발간 :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규약 심의에 맞춰 NGO 반박보고서 작성, 2008년 한국 사회권의 현실을 돌아보는 연속 이슈리포트 발간과 언론 공동기획 추진
- '희망복지리포트' 발간 : 활동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실태조사, 평가, 대안 모색하는 현장보고서 발간

시민경제위원회

• 2008년 활동목표

○ 삼성 이건희 일가의 불법행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에 주력
○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진행될 재벌 및 금융정책의 재벌편향적 후퇴시도를 막는 활동에 집중
○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혁 등 새로운 사업영역과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반 형성

• 주요사업 계획

1. 재벌 및 금융정책 대응

- 새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재벌 금융정책(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제 관련 공정거래법, 금산분리 관련 은행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금산법 등) 비판 및 법 개악 시도 저지
- 정부 및 국회 동향 모니터
- 참여연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수집(정부와 국회 등 국가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사회단체, 전문가 발표 자료 등) 및 홍보
- 관계분야 전문가와의 관계형성과 내용 이해를 위한 연속 초청 강연
- 금산분리 시리즈 보고서, 재벌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보고서 등 <경제이슈리포트> 발간

2.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및 책임추궁

- 삼성 특검의 수사 과정, 결과 모니터 및 비평
- 우리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추궁
- '삼성과 관료' 보고서, 관료와 결탁한 삼성의 정책왜곡사례 발표

3. 대기업 하도급 횡포, 담합 등 개선을 위한 활동의 기반마련

- 대기업 중소기업간 부당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방안 마련, 추진
-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지는 실증적 사례 보여주는 보고서 발간 등 대기업 편향적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활동
- 담합, 독과점 문제에 대한 이슈화, 공정거래법 보완 개정 등 법제도 개선 활동 추진
- 관계분야 전문가와의 관계형성과 내용이해를 위한 연속 초청 강연

4. 경제관료 DB 작성, 감시활동 기반구축

조세개혁센터

- 2008년 활동목표

○ 안식년 등으로 인한 실행위원들의 공백으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 어려운 조건, 기본활동력을 유지하는데 활동의 일차적 목표를 둠

○ 주제별로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 작성 중심의 활동

○ 비과세 감면 확대, 부동산세제 개악 등 기존 제도를 개악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응

- 주요사업 계획

1. 조세 논단

- 한 달에 한편이상 실행위원 또는 타 전문가의 하나의 주제별 논단 발행
- 관련 논리 축적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함

2.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톺아보는 세제 개혁과제

- 미술품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 금융실명제 보완을 통한 차명거래 방지 등

3. 비과세 감면 등 늘어나는 각종 공제제도 확대 반대

- 임시투자공제 재연장 추진 반대 활동, 연구자 대상 찬반 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4. 부동산관련 세제 개악 저지 활동

- 종합부동산세 원안 유지, 양도소득세 개악 저지 활동

Ⅱ. 권력감시 분야

의정감시센터

• 2008년 활동목표

○ 민생의 관점, 신정경유착의 관점에서 정당 활동과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의정평가의 기준 제고

○ 자유주의 정당, 진보 정당이 건강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비판과 협력 모색

○ '유쾌한 정치토크' 개편, 청소년, 대학생 대상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 기획 등 정치교육 프로그램의 진일보

○ '열려라국회' 개편으로 의정감시 원스톱 시스템 구축

○ 회원과 재정확대 프로그램 기획, 실행위원 보강 등으로 인프라 확대

• 주요사업 계획

1. 국회 및 정당 모니터링

- 모니터링 보고서의 기획 및 구성 혁신
- 모니터 대상 : '재벌 중심의 경제금융정책, 한반도 운하, 개발건설 정책 등을 신정경유착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주택, 교육 문제와 각종 민생 정책에 대한 의원별 입장을 알기 쉽고, 비교하기 쉽게 리스트업'하여 공개
- 국회 모니터링 보고서 : 개원 전에는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논평 형식으로 발표, 폐회 후에는 국회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발표

- '정당 정책 비교 리포트(가)' 발표 정례화
- 4월 중순, 17대 국회 평가 사업 진행. 시민참여형 평가 토론회 개최
- 참여연대 제안 법안과 평가보고서 발표는 연 1회로 정례화

2. 의원 모니터링

- 경제금융정책, 개발정책, 교육정책 등 이해관계가 명확한 분야 의정활동과 후원금, 겸직 등을 연동하는 모니터링 체계 확립
- 겸직, 후원내역, 부패 전력 등 기본 모니터링 강화하고, 보고서와 '열려라국회' 메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DB 제공

3. 정치제도 개혁

- 국회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 개선 필요. 제도 개혁보다는 축조심사, 공청회, 청문회 등 기존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수로 밀어붙일 가능성 대비하여, '민주주의 파괴, 배제의 정치' 등 대응 논리 개발과 프레임 설정
-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주적 절차 확립 등을 위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 추진

4. 온라인 사업

○ 열려라국회

-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시민참여형 DB사이트로 개편
- 별도 페이지를 통해 각 정당의 주요 현안 및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입장 DB 구축
- 참여연대의 모니터링 결과 중심으로 사이트 편집 방향 재편
- 일부 컨텐츠 유료화 : 기본 DB는 '열려라국회'를 통해 일상적으로 제공하되 2, 3차 가공이 필요한 DB는 유료화 검토.

○ 의정센터 블로그

- 사진, 동영상 등 비주얼을 강화한 포스트 구성
- 유명 블로거, 시민논객을 섭외하여 정치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있는 공간으로 구성

○ 뉴스레터

- 정당과 의원에 대한 평가자료와 DB 제공 웹진으로 개편
- 구독자수 배가 캠페인 진행 (현재 구독자 수 3,000명)

5. 시민참여 사업

- '유쾌한 정치토크'를 이어가되 대상이 분명한 주제를 선정, 시민들의 관심사, 시대적 과제 중심으로 프로그램 기획. 100분 토론처럼 일부 고정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 중
- 청년연수 '입법청원 체험'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청소년 대상의 민주주의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방학 중 2개월 모의국회 등 진행 예정

6. 18대 총선 대응

- 포탈사이트와 공동 진행 협의 중. 핵심 프로그램으로 정책에 대한 입장 중심의 정보제공과 정당별 대표 필진들을 섭외하여 매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반박과 해명 등이 이뤄지도록 칼럼 기획할 예정
- 후보에 대한 정보공개 활동, 현역의원 출마자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논의된 민생 현안에 대해 입법과 표결 결과 공개, 현역 외 예비후보의 경우, 한국사회 주요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고 이를 공개할 예정
- 성평등, 인권, 사회적 차별, 책임성 등 업그레이드 된 기준 제시할 계획

사법감시센터

• 2008년 활동목표

○ 판결비평과 변호사윤리 관련 활동의 내실화
○ 로스쿨과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

• 주요사업 계획

1. '변호사징계정보확인' 웹사이트 확대

- '변호사징계정보 확인' 사이트를 변호사윤리 측면에서의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확대 발전

2. 시민참여 중심의 기획 판결비평 활동

- (준)전문가 비평을 중심으로 한 방식에서 일반 시민과 학생들의 판결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전환 시도

3. 법관 및 검사들의 퇴직후 활동 모니터 보고서 2탄

- 2004년 법관 및 검사의 퇴직후 변호사개업실태 조사 보고서와 2006년 대형로펌의 퇴직 판검사 영입실태 조사 보고서에 이은 후속 모니터 보고서 발표

4. '국민참여재판'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활동

- 시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과 이해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재판 진행내용 소개를 포함한 방청

기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함

5. 로스쿨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활동

- 인가예정 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다양성, 법률가교육진입장벽 완화 등을 조사
- 로스쿨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변호사자격시험제도 또한 최대한 바람직하게 만들도록 촉구하는 활동 진행

공익법센터

• 2008년 활동목표

○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공익법센터의 활동력 정상궤도 진입
○ 젊은 법조인들의 공익활동 참여 촉진
○ 안정적인 공익소송 진행 위한 공익기금 확보

• 주요사업 계획

1. 공익소송 아이템의 적극적 발굴과 진행

- 장애인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한 웹페이지 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차별금지 운동 전개
- 사법시험 정원제 위헌소송 추진
-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사고 관련 공동소송대리인 지원활동 등 법률지원

2. 교육 및 홍보 사업

- 법대생 및 사법연수원생 대상 공익법 교육
- 참여연대 공익소송백서 발간

3. 회원 및 조직 확대

- 공익소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 인력 확보와 기금 모금

4. 변호사공익활동 장려 및 활성화 사업

-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공익활동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모니터

행정감시센터

• 2008년 활동목표

○ 한나라당 집권 후 예상되는 개발주의/부패인사 기용에 대한 대응 전개
○ 한반도 운하 등 건설관료 및 건설마피아(교수, 기업, 정치인)간의 관-경-정-학 유착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 관료감시운동의 체계적 진행을 위한 기본사업으로 관료 DB 구축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제도개혁운동
○ 행정감시센터와 실행위원회의 일상대응 역량의 강화

● 주요사업 계획

1. 관료 감시 위키피디아 구축

- 관료의 재산 및 경력, 부패 및 예산낭비 등 관련 관료 DB 구축
- 관료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기본자료 축적, 시민들이 직접 이용,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재산공개 현황, 예산낭비 등 감사 지적 현황, 주요 경력 등 공개 예정

2.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인사 관련 대응 사업

- 부패전력 및 부적절한 인사의 공직 진출저지 및 고위공직자인사청문회법 법제화
- 주요 등용 예상 인사 및 공직내정자에 대한 사전조사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재산 및 위법전력 등 도덕성 검증

3. 관-경-정-학 건설마피아들의 유착에 대한 감시 활동

- 대형국책사업 등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대규모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업과 관련하여 관경유착을 감시.
- 대형국책사업의 도입과정과 책임자를 분석하여 공개. 한반도 운하처럼 대규모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경고보고서 작성

4. 반부패 정책제안운동

- 반부패 운동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존의 행정개혁, 반부패 입법과제들에 대한 입법화 추진
- 공직자윤리법 개정(취업제한 및 이해충돌), 공익제보자 보호(민간부분공익제보 보호), 대통령 사면권 제한, 회의공개법 제정, 납세소송법의 제정, 고위공직자인사검증제도 등 법제화 추진

5. 정보공개 활성화

- 정보공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정보를 시민에게' 캠페인 등 2007년 공동기획 지속 추진
- 정보공개법의 실질적 개정 촉구

III. 평화·국제 분야

평화군축센터

• 2008년 활동목표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한 신정부 역할 및 대외정책 방향 제시
○ 냉전적 한미동맹 강화조치 집중 모니터링
○ 국방감시 및 군축논의 틀 구축
○ 비군사적 국제평화기여 방안 공론화
○ 비핵군축 평화운동과의 소통 강화

• 주요사업 계획

1. 기본정책 방향 대응

- 신정부 외교안보정책 기본 모니터 및 대안적 정책방향 제시
- 자주국방의 허구와 동맹정책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신정부의 외교안보, 대북정책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제언 활동 전개
- 연중 포지션 페이퍼 작업 진행, 이와 연동해 수시로 쟁점 토론회 개최

2. '평화국가' 담론 구체화, 내실화

- 담론 내실화 및 확산 위해 싱크 탱크와 공개 토론회 개최, 평화운동 진영 내 워크샵 진행
- 단행본 『2007 평화백서, 시민, '안보'를 말하다』 3월 출간 예정. 영문판, 일본판 발행 추진

3. 집중 모니터 과제

- 한미동맹 및 국방관련 현안 미사일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테러방지법, 한미전략동맹 선언, KHP(한국형헬기사업) 포함 국방중기계획, 방위비 분담금 협상, PKO(유엔평화유지군)신속파견법 등 집중 모니터링
- 이라크, 아프간 모니터링 지속

4. 국방감시 및 군축논의 틀 구축

- 국방개혁의 방향과 과제 논의를 위한 연속세미나 기획
- 국방 관련 전문가-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 연구 성과 축적, 인적 풀 확충 등으로 향후 국방 대응 역량 강화

5. 국제평화연대

○ 한일교류프로그램

- 분단정부 수립 60년, 일본 평화헌법 60년 즈음한 평화단체 공동기획
- 한일 평화연대를 위한 강좌 (3-4월), 일본 헌법 9조 세계대회 참가 (5월) 참가, '헌법의 평화주의와 평화국가 만들기' 국제회의 (7월), 한일 평화교류 (8월)

○ GPPAC 동북아 회의/GPPAC 아시아-태평양 회의 통한 국제 네트워킹 활동 지속

○ 미-인도 핵협정 공동 대응

6. 시민참여 프로그램

- 중고등 사회과목 교사 대상/ 대학생 대상 '평화학교' 기획
- 한일 교류프로그램과 연동

7. 국내연대

- 평화활동가 대회 내실화 및 확대
- 시민운동 진영의 한반도 정세 대응 논의 틀 구축

국제연대위원회

• 2008년 활동목표

○ 충원된 상근 역량으로 안정된 정책 감시 활동 시작

○ 출판, 교육 등을 통한 대중 활동 강화

• 주요 사업 계획

1. 연중 포럼

- 한국의 아시아 담론과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빈곤, 인신매매, 테러, 마약 밀매, 질병, 환경 등)를 주제로 언론사, 대학 연구소와 공동 진행, 이후 출판 활동으로 연계

2. 교육

- 연초 참여연대 인턴 교육 중 부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시도, (가칭) 국제인권학교 운영

3. 출판

- 버마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버마 민중의 삶을 그린 번역서 출판
- 연중 아시아 포럼 진행 후 후속 활동으로 출판과 연계
- 아시아의 주요 인권운동가들의 삶을 그린 전기문 출판

- 아시아 생각 칼럼 출판

4. 버마 민주화와 필리핀의 정치 살해 관련 연대 활동

- 꾸준한 정보 축적과 정세 분석을 통한 현안 대응, 각 캠페인 사이트/블로그의 활성화

5. ODA(대외원조) 감시

○ 정책 감시 활동

- 일상적인 동향 파악과 집중 과제별 정책 감시, 정책 의견서 제출

○ 연구팀 운영

- ODA 문제에 대한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생 이상을 대상으로 펠로우 모집, 6개월~1년의 주기로 팀 운영

○ 현지 탐방과 보고서 작성

- 연구팀을 중심으로 아시아 주요 원조 수원국가 현황 보고서 발간
- 원조 공여국가의 ODA정책과 현황을 한국과 비교하기 위한 현지 탐방
- 국제 원조 감시 단체들이 발간하는 주제별 보고서 작업에 참여

Ⅳ. 시민참여 분야

시민위원회

• 2008년 활동목표

○ 회원과 함께 걷는 참여연대 : 소통, 공유, 참여, 연대

○ 시민과 대화하는 참여연대 : 참여연대 문턱 낮추기와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 풀기

○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연대 : 시민강좌와 온라인을 통한 일상적 토론

○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운동 : 자원활동 활성화 지원, 인턴쉽/펠로우십 운영

○ 참여연대 컨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전달 방법 개발 : 홍보, 교육, 매체 실무 역량 확대

• 주요사업 계획

1. 회원과 함께 걷는 참여연대 : 소통, 공유, 참여, 연대

- '사람'에게 집중하는 회원 프로그램 마련 : 참여하고 싶은 회원행사, 제대로 감사하고 깊게 소통하며 참여연대와 유대감을 높여갈 수 있는 회원사업 마련
- 참여연대가 펼치는 일을 회원이 알고, 회원의 마음을 참여연대가 읽고 반영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매체들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통인동 편지' 등 온라인에서의 일상적 소통, <참여사회>를 통한 가치 공유, 긴급 현안에 대한 회원토론회 등의 오프라인 참여공간 등을 통해 '회원과 함께 걷는 참여연대'로 변모
- 회원정보관리 시스템(모아) 보완 마무리와 이를 기반으로 성실회원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체계 마련 및 운영

- 다양한 회원 참여 프로그램 마련 : 신입회원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역사탐방 교실, 주부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연대 집중 사업 토론의 장 등 참여하고 싶은 회원행사 개발
- 회원모임을 비롯한 참여연대 회원활동에 대한 적극적 안내 및 독려

2. 시민과 대화하는 참여연대① : 참여연대 문턱 낮추기

- 참여연대 소개의 혁신적 변화 : 참여연대의 활동과 지향을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편하도록 기본 홍보물과 영상자료 등의 컨텐츠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포
- 참여연대 메시지의 전달 방식 개선 : 개별 이슈에 대한 보도자료, 성명 등의 '예각적인 의견 전달' 위주의 메시지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활동의 맥락과 문제제기 이유까지 포함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
- 개편된 사이트의 블로그 시스템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참여연대와 시민과의 실시간 의견 교환과 토론
- 참여연대 회원이 중심이 된 '통인동 블로거'들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참여연대 웹사이트 전면에 배치하고, 이 의견들이 '인터넷 인기태그' 등으로 수렴되고 확인되도록 운영
- 참여와 연대 방법 제대로 알리기 : 회원 가입, 회원활동, 자원활동 등의 구체적 참여방법과 참여의 기쁨을 알려, 보다 가깝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재 마련

3. 시민과 대화하는 참여연대② :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의 실타래 풀어가기

-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적 대응
- 보수세력의 꾸준한 음해와 비방에 대해, 차근차근 대응. "자유기업원 발행,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반론(2008.2)"을 시작으로, 사실무근의 비방에 대해 반론문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잘못된 정보나 의도된 비방에 대한 정면 조치

- 온라인 공간에 퍼져있는 참여연대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진행

4. 시민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연대 : 시민강좌

-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찾는 회원과 시민의 공간으로 시민교육 사업 운영. 보수화에 대항하는 시민교육 공간, 대항을 넘은 대안 담론을 접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기획을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
- 2008년에는 강좌 외에, <청소년을 위한 시민운동 가이드북> 등 시민운동 관련 교재 등 컨텐츠 개발, 온라인 교육, 단발성 교육, 책읽기 모임 등 형식면에서 다양한 시도
- 평생교육시설 등을 이용해, 교사연수를 비롯해 대상층 및 교육수요가 확인된 프로그램도 시도
- 강좌 분야 : 주경야독(직장인 대상, 격월), 굿모닝세미나(주부 대상, 격월), 기획강좌(교사 직장인 대상, 연2회)를 계속 이어가고, 시민경제교실(가제)을 시리즈 강좌로 신설할 예정
-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각 활동부서에서 시민강좌와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고 지원

5.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운동 : 자원활동 활성화, 인턴십/ 펠로우십 운영

- 시민참여의 주요한 방법으로의 자원활동에 대해 적극적 의미부여와 안내
- 2007년부터 준비한 자원활동 지원과 운영체계 마무리. 이를 토대로 자원활동 활성화 독려
- 20대 청년층을 위한 시민운동 체험과 참여 방안으로 인턴십/ 펠로우십 연 2회 이상 운영과 체계적 지원
- 주부, 은퇴자 등을 비롯해, 계층별 연령별 직업별로 참여하기 편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6. 참여연대 컨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전달 방법 개발 : 홍보, 교육, 매체 실무역량 확대

- 업무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효율적 메시지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증대
- 참여연대 컨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될 방안 마련 : 통합적 체계적 관리와 혁신 시도
- 참여연대가 회원/시민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컨텐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마련
- 홍보, 교육, 매체 실무역량 확대를 위한 연수/교육과 이 분야의 자문/지원단 풀 구성

2008년 연대사업계획

- 집중 연대 과제
  - 한반도 운하 백지화
  -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 행위 진상 규명과 삼성중공업의 기름 유출 사고 등 사회적 책임 촉구
  - 대학 등록금 대책

- 관심 연대 과제
  - 이라크 파병군 완전 철수
  -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제
  -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 사립학교의 시장화, 사유화 정책 저지, 부패 척결 등 개혁

※ 관심과제는 계기나 조건에 따라 주요연대과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현행 연대 사업을 나열한 것임

2008년 부설기관 사업계획

참여사회연구소

- 활동목표

○ 보수의 시대에 대응하는 진보적 대안담론 형성에 기여

○ 연구소 장기적 사업 모델의 마련 : 장기적인 연구과제에 따른 리서치 활동의 강화

○ 연구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분과모임 재편 및 활성화를 꾀함

○ 『시민과 세계』 및 단행본 출판 사업 강화

○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토대 마련

- 주요사업 계획

1. 심포지움, 토론회 개최

- 상반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
-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대운하, 공공부문 민영화 등)
- 연구소 내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월례 발표회 진행

2. 출판사업

1) 『시민과 세계』

- 장기 구독자와 도서관 구독 확대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목표로 독자 모니터팀 구성
- 보수 단체의 매체 및 진보담론 동향에 대한 모니터를 진행하여, 편집기획 과정을 체계화

2) 단행본 출판

- 기존 『시민과 세계』 원고를 재구성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추가적으로 대안담론 제시를 목표로 단행본 출판을 기획
- 『시티즌십의 이해 citizenship』(2월 예정), 『시민적 공화주의 civic republicanism』 등 번역서 출간

3. 교육 사업

-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에 맞춰, 대한민국사에 대한 대중강좌 진행
- 번역서 발행에 맞춰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전문 강좌 진행
- 민주시민교육 사업 진행 : 참여연대 교육팀과 공동으로 2008년 여름방학에 사회과교사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직무연수 프로그램 진행

4. 일상적 연구 활동 기반 마련

- 상반기 공공성 주제로 소형 연구 프로젝트 신청
- 연구기획위원회를 새로 구성, 연구 주제 선정 및 학술행사 기획의 중심단위로 함. 공공성, 사회적 경제 등의 리서치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연구자를 규합하여 연구 진행까지를 책임지게 할 것임
- 워킹 페이퍼, 현안(담론) 팜플릿 등 연구기획위회를 통한 일상적인 연구소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개발할 것임

안건 II

결산 및 2008년 예산안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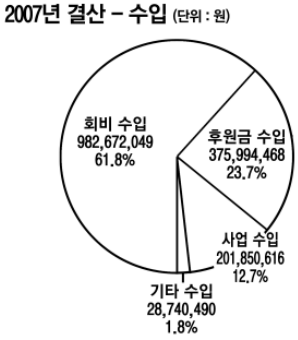
- 2007년 결산
- 2008년 예산
- 보금자리 특별보고

2007년 결산

○ 수입

단위 : 원

과 목	수 입
회비 수입	982,672,049
후원금 수입	375,994,468
사업 수입	201,850,616
기타 수입	28,740,490
총 계	1,589,257,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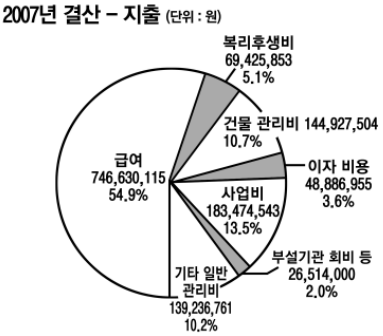


※ 2007년은 보금자리 이전 모금행사로 인해 후원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회비 수입은 감소해 월 8천 2백여만 원에 그쳤습니다. 회비수입에는 부설기관인 참여사회 연구소 회비가 포함되었습니다.

○ 지출

단위 : 원

과 목	지 출
급여	746,630,115
복리 후생비	69,425,853
건물 관리비	144,927,504
이자 비용	48,886,955
사업비	183,474,543
부설기관 회비 등	26,514,000
기타 일반 관리비	139,236,761
총 계	1,359,095,731



※ 건물관리비에는 2007년 8월 통인동으로 이사하기 전 안국동 건물 임차료 7천여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통인동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2007년 한 해 동안 4천 8백여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이사비용 등으로 인해 기타 일반 관리비가 크게 지출 되었습니다.

※ 부설기관 회비는 참여사회 연구소 회비수입을 상계 처리한 것입니다.

대 차 대 조 표

제14기 :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3기 : 2006년 12월 31일 현재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 제외] (단위 : 원)

과 목	제 14 (당) 기	제 13 (전) 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462,661,654)	(1,153,448,357)
(1) 당좌자산	(462,661,654)	(1,153,448,357)
1. 현금	7,318,540	4,600,003
2. 보통예금	264,346,722	460,054,480
3. 단기대여금	0	1,000,000
4. 상근자교육기금	94,262,568	199,987,415
5. 연대기금	29,298,672	30,495,352
6. 퇴직기금	64,094,471	67,586,980
7. 도시락기금	3,340,681	2,174,432
8. 보금자리예금	0	386,351,695
9. 선급금	0	1,198,000
Ⅱ. 비유동자산	(4,228,033,526)	(3,270,577,530)
(1) 투자자산	(177,810,266)	(177,810,266)
1. 장기대여금	177,810,266	177,810,266
(2) 유형자산	(4,050,223,260)	(2,867,767,264)
1. 토지	2,634,664,824	0
2. 건물	1,415,558,436	0
3. 건설중인 자산	0	2,867,767,264
(3) 기타 비유동 자산	0	(225,000,000)
1. 임차보증금	0	225,000,000
자산총계	4,690,695,180	4,424,025,887
부 채		
Ⅰ. 유동부채	(26,501,352)	(16,501,442)
1. 예수금	21,961,352	12,409,212
2. 부가세예수금	4,540,000	4,092,230
Ⅱ. 비유동부채	(894,094,471)	(867,586,980)
1. 장기차입금	800,000,000	800,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64,094,471	67,586,980
3. 장기임대보증금	30,000,000	0
부채총계	920,595,823	884,088,422
자 본		
Ⅰ. 자본금	(3,770,099,357)	(1,850,000,625)
1. 자본금	230,161,892	0
2. 출연금	144,195,330	144,195,330
3. 보금자리출연금	1,705,805,295	1,705,805,295
(당기순이익) 당기: 230,161,892원 전기: 119,267,435원		
4. 임의적립금	491,839,627	491,839,627
자본총계	3,770,099,357	3,539,937,465
부채와자본총계	4,690,695,180	4,424,025,887

손 익 계 산 서

제14기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13기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 제외]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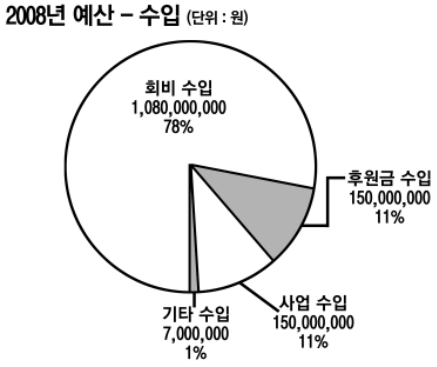
과 목	제 14 (당)기		제 13 (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출액		**1,560,517,133**		**1,322,015,507**
1. 회비수입	982,672,049		1,082,777,500	
2. 정기후원금수입	22,040,620		20,652,480	
3. 부정기후원금수입	353,953,848		57,487,435	
4. 사업수입	201,850,616		161,098,092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1,560,517,133**		**1,322,015,507**
Ⅳ. 판매비와관리비		**1,307,270,992**		**1,173,948,869**
1. 급여	640,530,530		540,506,167	
2. 상여	103,920,835		92,364,630	
3. 잡급	2,178,750		3,019,409	
4. 퇴직급여	12,217,491		13,480,888	
5. 복리후생비	69,425,853		74,834,760	
6. 여비교통비	1,397,060		722,000	
7. 통신비	31,361,160		27,798,690	
8. 수도광열비	3,393,440		3,763,500	
9. 전력비	6,644,400		-	
10. 세금과공과금	10,620,600		10,197,030	
11. 임차료	71,930,212		-	
12. 수선비	20,324,400		2,055,300	
13. 보험료	938,960		-	
14. 차량유지비	2,300,000		1,909,200	
15. 교육훈련비	24,489,290		5,783,670	
16. 도서인쇄비	4,138,670		7,939,260	
17. 회의비	8,523,330		6,652,530	
18. 사무용품비	12,620,740		2,751,970	
19. 소모품비	6,724,250		2,148,920	
20. 지급수수료	42,187,471		5,975,780	
21. 보관료	776,000		1,882,000	
22. 광고선전비	220,000		352,300	
23. 건물관리비	11,273,892		115,520,648	
24. 잡비	1,614,631		13,283,668	
25. 사업비	183,474,543		174,015,049	
26. 발송비	7,530,484		5,079,000	
27. 부설기관회비등	26,514,000		61,912,500	
Ⅴ. 영업이익		**253,246,141**		**148,066,638**
Ⅵ. 영업외수익		**28,740,490**		**100,195,090**
1. 이자수익	20,533,593		34,087,143	
2. 배당금수익	-		2,333,630	
3. 투자자산처분이익			61,569,813	
4. 잡이익	8,206,897		2,204,504	
Ⅶ. 영업외비용		**51,824,739**		**2,744,660**
1. 이자비용	48,886,955		-	
2. 기부금	2,930,000		2,744,660	
3. 잡손실	7,784		-	
Ⅷ. 당기순이익		**230,161,892**		**245,517,068**

2008년 예산

○ 수입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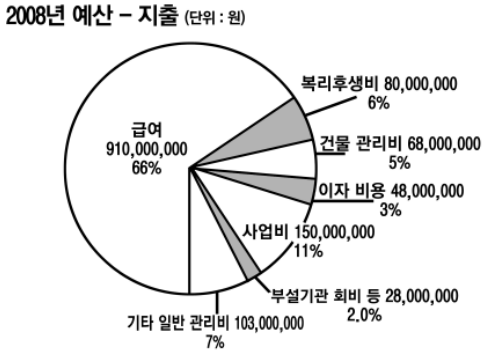
과 목	수 입
회비 수입	1,080,000,000
후원금 수입	150,000,000
사업 수입	150,000,000
기타 수입	7,000,000
총 계	1,387,000,000



○ 지출

단위 : 원

과 목	지 출
급여	910,000,000
복리 후생비	80,000,000
건물 관리비	68,000,000
이자 비용	48,000,000
사업비	150,000,000
부설기관 회비 등	28,000,000
기타 일반 관리비	103,000,000
총 계	1,387,000,000



손 익 계 산 서 (예산)

제15기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 제외] (단위 : 원)

과목	제 15 기	
	금 액	
Ⅰ. 매출액		**1,380,000,000**
1. 회비수입	1,080,000,000	
2. 부정기후원금수입	150,000,000	
3. 사업수입	150,000,000	
Ⅱ. 매출원가		**0**
Ⅲ. 매출총이익		**1,380,000,000**
Ⅳ. 판매비와관리비		**1,336,000,000**
1. 급여	780,000,000	
2. 상여	130,000,000	
3. 복리후생비	80,000,000	
4. 통신비	24,000,000	
5. 전력비	24,000,000	
6. 세금과공과	20,000,000	
7. 수선비	2,000,000	
8. 차량유지비	2,000,000	
9. 교육훈련비	20,000,000	
10. 도서인쇄비	5,000,000	
11. 회의비	10,000,000	
12. 사무용품비	5,000,000	
13. 소모품비	5,000,000	
14. 지급수수료	15,000,000	
15. 광고선전비	1,000,000	
16. 건물관리비	20,000,000	
17. 잡비	5,000,000	
18. 사업비	150,000,000	
19. 발송비	10,000,000	
20. 부설기관회비등	28,000,000	
Ⅴ. 영업이익		**44,000,000**
Ⅵ. 영업외수익		**7,000,000**
1. 이자수익	5,000,000	
2. 잡이익	2,000,000	
Ⅶ. 영업외비용		**51,000,000**
1. 이자비용	48,000,000	
2. 기부금	3,000,000	
Ⅷ. 당기순이익		**0**

보금자리 특별보고

참된 희망, 通人 참여연대

- 참여연대는 2006년 2월 베이스캠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그 해 4월 통인동 부지를 매입하고, 12월에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이 후 참여연대 1만여 회원과 각계각층의 소중한 정성으로 2007년 8월 10일 드디어 새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 지난 2년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회비 한 번 더 내기'와 '회비증액'에 동참해 주신 회원 1700여명, 5년간 지속적 후원이나 일시 후원을 약속해 주신 '백년지기' 회원 200여명, 그 외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각종 후원행사를 통해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통인동 '희망1번지'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수입 결산 (2006~2007년)

단위 : 원

보금자리 후원금	
회비 증액 등 모금 운동	2,059,759,143
총 계	2,059,759,143

기존 자산	
씨앗기금(10년 적립분)	568,367,530
사무실 임차보증금	255,000,000
경상비 보유액	67,096,587
총 계	890,464,117

부 채	
은행 대출금	800,000,000
부서 차입금	300,000,000
총 계	1,100,000,000

수입 총계	
후원금, 기존 자산 및 부채	4,050,223,260

○ 지출결산 (2006~2007년)

단위 : 원

토 지	
토지 매입비	2,460,000,000
토지매입 중계수수료	22,140,000
토지 등록세/취득세	125,886,260
기타 비용	26,638,564
총 계	2,634,664,824

건 물	
건물공사비	1,247,000,000
설계/감리비	37,620,000
등록세/취득세	37,859,530
철거 및 복구 비용	29,850,000
옥상 등 내/외부공사	63,228,906
총 계	1,415,558,436

지 출 총 계	
토지 및 건물	4,050,223,260

- 통인동 보금자리는 총 40억 5천여만 원의 비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약 11억 원은 은행 및 부서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2008년 5월 23일은 은행 대출 만기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매월 400여만 원의 이자납부와 함께 원금상환을 시작해야합니다.

- 향후 산적해 있는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회원 여러분과 함께라면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안건Ⅲ

임원인선안 승인

2008년 임원인선안

* 굵은 글씨 : 신임임원

○ 공동대표

임종대(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 청화(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 감사

윤형근(회계사) 김영희(변호사)

○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스님) 박상증(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은정(교수, 서울대 법학) 백낙청(시민방송RTV 명예이사장) 오재식(아시아교육연구원장) 이삼열(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상희(서울대 명예교수) 이선종(원불교 서울교구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명예 이사장)**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성(교수, 동국대 북한학)

부위원장: 조국(교수, 서울대 법학)

• 당연직 운영위원

임종대(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차병직(정책자문위원장) 박순성(운영위원장) 조국(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명(집행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태(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식(정책위원장) 김민영(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태호(협동사무처장) 강원택(의정감시센터 소장, 숭실대 교수) 한상희(사법

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교수)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김진방(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교수)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경건(행정감시센터 소장, 서울시립대 교수)** 김창준(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단장, 변호사) 이광수(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장, 변호사) **구갑우(평화군축센터 소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종해(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가톨릭대 교수) 이병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교수) 김남근(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이헌욱(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변호사) **손혁상(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진영종(시민위원회 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양윤재(재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사업가) **박영선(참여사회 편집위원장)** 전상직(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김철희(회원모임협의회 회장) 이혜미(회원모임 참좋다) 허지현(회원모임 청년마을)** 윤형준(회원모임 시민기자클럽) **한승호(회원모임 산사랑)**

• 선출직 운영위원

기영상(사업가) 기우봉(前 회원모임 산사랑 회장) 김민웅(교수, 성공회대 NGO대학원) 김상균(방송인) 김상준(교수, 경희대 NGO대학원) 김성희(연구원, 모심과살림연구소) 김영수(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김영태(사업가) 김원철(사업가) 김종복(사업가) **맹행일(자원활동가)** 박상철(직장인) 박상필(교수, 성공회대 NGO대학원) **박진호(직장인) 방정균(교수, 상지대 한의학)** 법안(스님, 금선사) **변이욱(치과의사)** 석락희(직장인) 성승택(직장인) 송영준(자원활동가) **양권석(성공회대 부총장)** 오세중(변리사) 유영표(민주화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이기호(교수, 성공회대) 이상미(직장인) 이상윤(의사) 이선노(사업가) 이은주(사업가) **이준한(교수, 인하대 정치학) 이찬진(변호사) 이해숙(前 회원모임협의회 회장)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 이희영(교수, 대구대 사회학)** 임주일(前 회원모임 산사랑 회장)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영석(교수, 성공회대 중국학) **정건화(교수, 한신대 경제학) 정성훈(치과의사)** 정찬휘(직장인) 조용상(직장인) 주진오(교수, 상명대 사학과) **최태욱(교수, 한림대 국제관계학) 최현(교수, 제주대 사회학) 최호열(사업가)** 토진(스님, 수국사) 퇴휴(스님, 무진법장사) 하승수(교수, 제주대 법학) **하원상(직장인)** 한명희(자영업) 한영혜(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현종(스님, 삼성암) 홍천희(자원활동가)

○ 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연명(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

부위원장: **김진욱(변호사)** 홍성태(교수, 상지대 문화컨텐츠학과)

• 당연직 집행위원

임종대(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차병직(정책자문위원장) 박순성(운영위원장) 조국(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명(집행위원장) **김진욱(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태(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식(정책위원장) 김민영(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태호(협동사무처장) 강원택(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김진방(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경건(행정감시센터 소장)** **구갑우(평화군축센터 소장)** 김종해(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병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남근(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손혁상(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진영종(시민위원회 위원장) 양윤재(재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영선(참여사회 편집위원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김철희(회원모임협의회 회장)**

• 선출직 집행위원

김정인(교수, 춘천교육대) 이남주(교수, 성공회대 중국학) **이상훈(변호사)**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차병직(변호사)

부위원장: 손혁재(교수, 국민대 행정학) 조희연(교수, 성공회대 통합대학원 원장)

• 정책자문위원

김호기(교수, 연세대 사회학)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호성(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 백종만(교수, 전북대 사회복지학) 윤상철(교수, 한신대 사회학) 장하성(교수, 고려대 경영학) 조흥식(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 한인섭(교수, 서울대 법학)

○ 정책위원회

위원장 : 김기식

○ 사무처장

김민영

○ 협동사무처장

박원석 이태호

부록

- 참여연대 정관
- 참여연대 기구표
- 참여연대 노래

참여연대 정관

1994. 9. 10. (제정)
1995. 3. 23. (1차 개정)
1996. 3. 13. (2차 개정)
1997. 9. 10. (3차 개정)
1998. 9. 27. (4차 개정)
1999. 2. 6. (5차 개정)
2000. 2. 19. (6차 개정)
2001. 2. 10. (7차 개정)
2002. 2. 23. (8차 개정)
2003. 3. 15. (9차 개정)
2005. 3. 12. (10차 개정)
2006. 2. 25. (11차 개정)
2006. 9. 13. (12차 개정)
2007. 3. 3. (1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 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 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15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 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 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과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 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 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입] 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 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달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칙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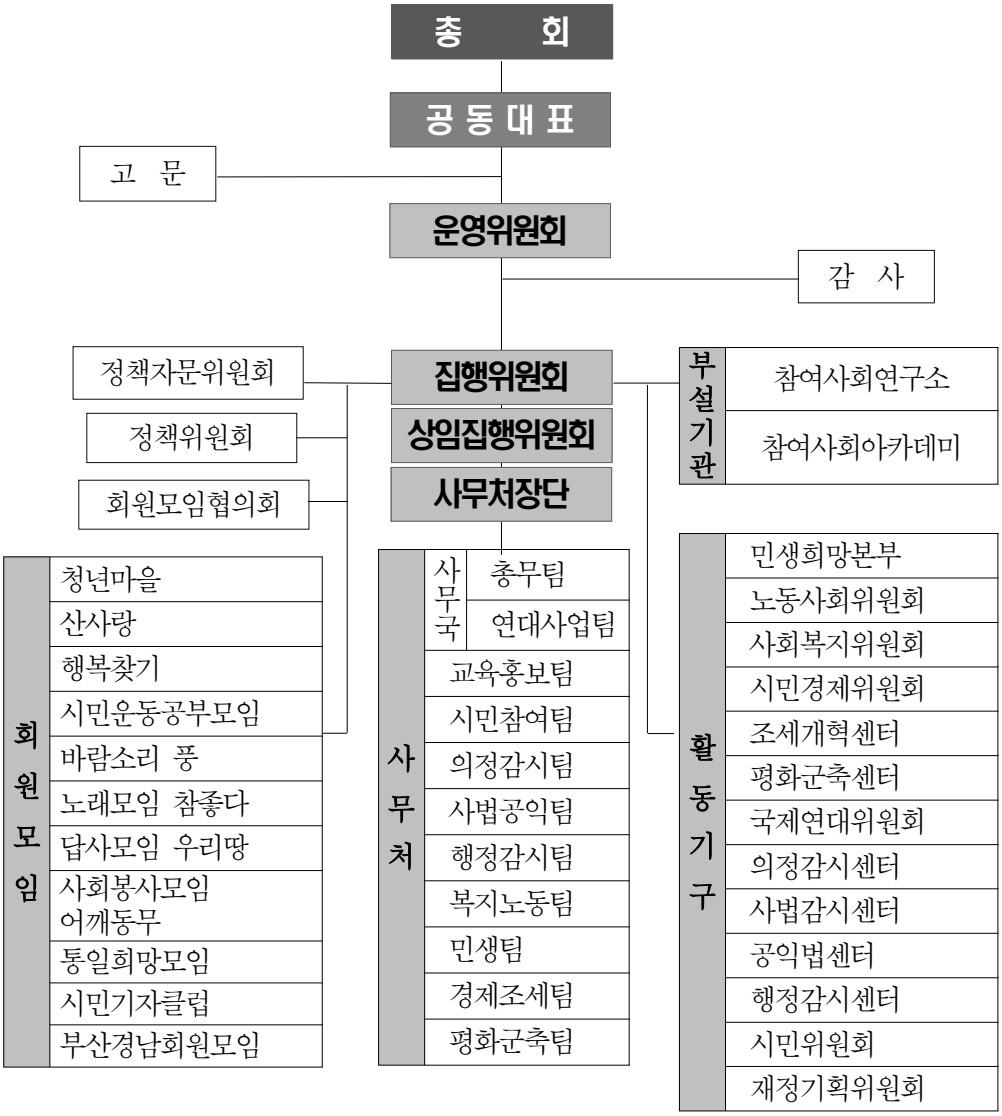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참여연대 기구표

2008. 2. 23. 현재



참여연대 노래

지근식 작곡

1.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아름답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2.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정의롭고 맑고 깨끗해진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시민들의 목소리로 참여연대
시민의 권익은 우리가 지키자

3.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희망 속에 서로 의지하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마침내 큰 강물 이룬다

후렴
참여하자 연대하자 그 꿈 우리 함께 이루기 위해
참여하자 연대하자 아름답고 밝은 세상 이루기 위해